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서 병 호

2014. 9

머 리 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국내은행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이유로 저금리와 규제비용 증가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대손비용의 증가도 경영실적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경험에서 보듯이 대손비용의 증가는 다른 요인들과 달리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손비용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는 다소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손비용의 개념 및 계산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문헌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손비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등을 제시한 이후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증가에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내은행은 해외 주요국 은행에 비해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이 현저히 높으므로 경영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하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국내은행의 대출증가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명목GDP 증가율을 상회하면 대손비용이 증가하므로 국내에서의 대출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손비용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경기민감 업종으로의 대출 비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순이자마진을 확대하기 위해 위험자산 취급 비중을 확대할 경우 대손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적정수준의 위험자산 비중을 선택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금융산업연구실의 서병호 박사가 작성하였으며, 강이원 연구원은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소중한 심사의견과 본 연구원 주례세미나에서의 유익한 논평이 본 보고서의 체계

개선과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윤 창 현

목 차

요 약

I. 서 론	1
II. 대손비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6
1. 개념	6
2. 선행연구	15
III.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및 국제비교	19
1.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19
2. 은행 대손비용의 국제비교	21
IV. 대손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28
1. 실증분석 모형과 변수	28
2. 실증분석 자료 및 특성	46
3.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50
V. 정책적 시사점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의 은행 대손충당금 제도 추이	9
〈표 2〉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기준	11
〈표 3〉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방법	13
〈표 4〉 각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 추이	14
〈표 5〉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추이	19
〈표 6〉 국내은행의 여신 건전성 추이	20
〈표 7〉 대손비용의 국제비교	21
〈표 8〉 무수익여신비율의 국제비교	22
〈표 9〉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국제비교	23
〈표 10〉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의 국제비교	23
〈표 1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식	25
〈표 12〉 표본은행의 대손비용 통계	30
〈표 13〉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추이	34
〈표 14〉 기업대출 관련 한국은행의 정책 추이	36
〈표 15〉 가계부채 관련 감독당국의 정책 추이	37
〈표 16〉 기업대출 관련 감독당국 정책 추이	39
〈표 17〉 건설업 대출 관련 정책 추이	41
〈표 18〉 변수의 출처 및 계산방식	47
〈표 19〉 주요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	48
〈표 20〉 표본 관련 국내은행 인수·합병	49
〈표 21〉 연도별 표본은행	50
〈표 22〉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51
〈표 23〉 실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53
〈표 24〉 예상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54
〈표 25〉 예상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55

그림 목 차

〈그림 1〉 국내은행의 수익성 추이	1
〈그림 2〉 국내은행의 대손상각비 추이	2
〈그림 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판관비, 이자비용 추이	3
〈그림 4〉 외환위기 전후 국내 일반은행의 경영실적	4
〈그림 5〉 손익계산서 상의 대손비용 예시	7
〈그림 6〉 대차대조표 상의 대손상각비 예시	8
〈그림 7〉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규모	24
〈그림 8〉 2013년 국내은행의 대손상각 추이	26
〈그림 9〉 2013년 국내은행의 연체율 추이	26
〈그림 10〉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율 및 명목GDP 성장률	33
〈그림 11〉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및 신용대출 비중	35
〈그림 12〉 국내은행의 건설업 대출 및 제조업 대출 비중 추이	40
〈그림 13〉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42
〈그림 14〉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추이	43
〈그림 15〉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45

요 약

I. 서 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대손비용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며,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고려할 때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은 매우 중요
 - 1997~1999년 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이 314.6조원에 달하면서 국내은행은 동 기간 218.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수의 은행이 파산
 - 2005~2007년 중 매년 4조원을 하회하던 국내은행의 대손상각비는 2008~2013년 중 매년 9조원을 상회

II. 대손비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개념

-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대손상각비와 대손준비금의 합계이며, 이는 손익계산서 상의 차감항목으로서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
 - 국내은행은 영업이익 계산 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계에서 판매관리비와 대손상각비를 차감하며, 당기순이익 계산 시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에서 법인세비용과 대손준비금을 차감
- 대손상각비는 과거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불리던 항목으로서 기말 기준으로 계산된 필요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위해 은행이 실제로 전입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

- 대손상각비는 이번 기말 기준으로 계산된 필요 대손충당금과 지난 기말 기준으로 계산되어 적립된 대손충당금 간의 차액에 이번 기에 실제로 발생한 부실채권 손실액을 합산한 개념
- 대손준비금은 2011년 K-IFRS의 도입에 따라 국내은행이 계산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 상의 최저적립기준에 따라 계산된 최소적립액 간의 차액을 의미
 - 대손준비금은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한 후 이익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최저적립액보다 크면 환입(-)

2. 선행연구

- 은행의 대손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손충당금 규모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본관리 가설, 수익평준화 가설, 신호 가설 등을 제시
 - 자본관리 가설은 1990년 Moyer가 제시한 것으로서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의 일부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하지 못한 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가설
 - 수익평준화 가설은 1995년 Collins 등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은행의 경영진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가설
 - 신호 가설은 1994년 Wahlen이 제시한 것으로서 은행의 경영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한다는 가설
 - 최효순(2003), 문현주(2005) 등이 국내은행에는 신호 가설이 들어맞는다고 발표했으며, 배수현·김종두(2012)는 국내은행의 경우 자본관리 및 수익평준화 가설도 적용된다고 발표

Ⅲ.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및 국제비교

1.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009년부터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자이익 대비 대손비용의 비중도 2007년 12.2%에서 2013년말 31.2%까지 확대된 상황

2. 은행 대손비용의 국제비교

- 국내은행은 해외 주요국 은행에 비해 건전성이 우수한데도 대손비용은 매우 높는데, 이는 국내은행이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기 때문
 - 2012년 국내 10대 은행(총대출금 기준)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평균 1.39%로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10대 은행 평균인 2.71%를 하회
 - 반면 2012년 국내 10대 은행의 대출채권 대비 대손상각비 비중은 0.77%로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10대 은행 평균인 0.57%를 상회
 - 2012년 국내 10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2.72%로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10대 은행 평균인 65.12%를 현격히 상회

Ⅳ. 대손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모형과 변수

- 본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손비용 변수로는 대출채권 대비 대손비용 비중, 대출채권 대비 실손비용 비중, 대출채권 대비 예상 대손비용 비중 등을 사용

- 각 변수를 대출채권 대비 비중으로 사용한 이유는 대출채권의 규모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의 자연증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며, 실손비용은 당기 대손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규모로서 대손비용의 90%를 차지
- 반면 예상 대손비용은 당기 대손충당금과 지난 기 대손충당금의 격차로서 미래의 건전성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치(또는 전략적 선택)를 반영

■ 본 보고서의 대손비용 분석에서는 대출 증가율, 대출 포트폴리오, 명목 순이자마진, 비이자수익 비중 등을 독립변수로 이용

- 대출 증가율은 과다대출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개별은행의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로 계산
- 대출 포트폴리오는 취약업종의 부실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기업대출 대비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비중, 기업대출 대비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비중 등을 사용
- 순이자마진은 신용리스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명목 순이자마진을 사용
- 비이자수익 비중은 수수료수익 비중의 확대가 대출 취급 및 심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포함

■ 본 보고서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 분석에서는 수익성, 자본적정성, 신입 CEO 등을 독립변수로 이용

- 수익성 지표는 수익평준화 가설의 검증을 위해 포함되었으며, 총자산이익률이나 고이익 더미변수(총자산이익률이 해당연도 국내은행의 평균보다 높으면 1, 아니면 0)를 사용
- 자본적정성 지표는 자본관리 가설의 검증을 위해 포함되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이나 저자본 더미변수(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미달하면 1, 아니면 0)를 사용
- 신입 CEO는 CEO의 교체가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되었으며,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이 새로 부임하면 1이고 아니면 0

- 대손비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대출증가율,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더미변수, 순이자마진, 비이자수익 비중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손비용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
 - 대손비용을 대손비용 비중으로 하거나 실손비용 비중으로 하거나 실증분석 결과는 유사

- 대손충당금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고이익 더미변수와 BIS 자기자본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상 대손비용 비중과 각각 양(+)과 음(-)의 상관관계
 - 수익평준화 가설은 은행의 수익성이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자본관리 가설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된 것으로 해석

V. 정책적 시사점

- 국내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보신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스페인처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동태적으로 적용할 필요
 - 국내은행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취약업종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경기호황기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
 - 이는 대출증가율과 대손비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경기호황기의 과다 대출에 의한 경기침체의 대손비용 급증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국내은행이 취약업종이나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에 대한 숨은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적정 이윤을 보장할 필요

- 국내은행이 위험자산을 적극 취급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산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감독당국이 수수료나 금리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대출문턱이 높아질 가능성
- 이는 순이자마진과 대손비용 간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순이자마진 확대를 통해 높은 대손비용의 유지를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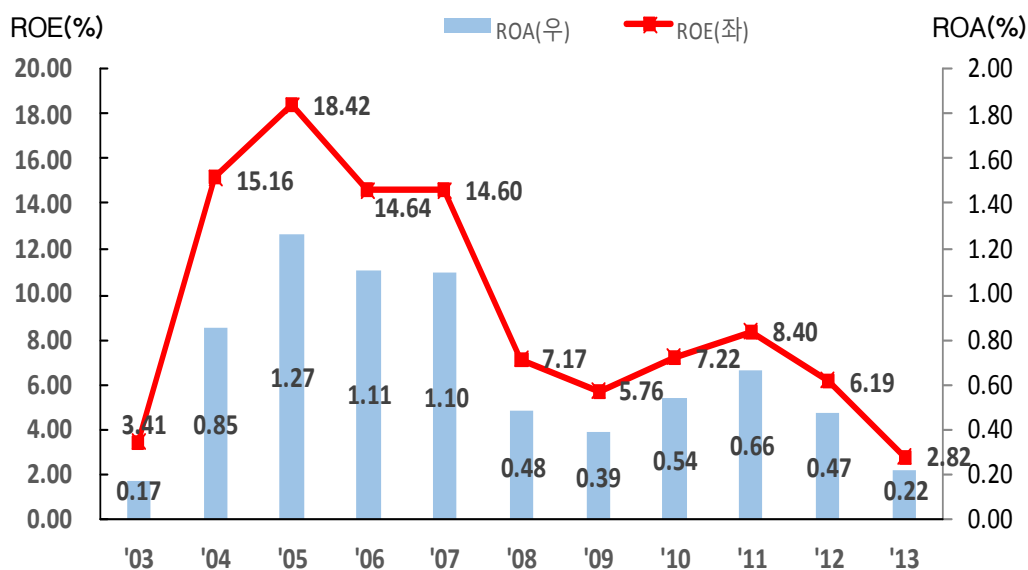
■ 한편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적절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고수익 은행 더비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볼 때 수익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주기적 검사가 필요

I. 서론

최근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에 비해 현격히 악화된 가운데 2013년에는 수익성이 과거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4%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7.2%로 하락한 이후 2013년까지 9%를 하회하고 있다. 2013년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8%로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3.4%)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그림 1> 국내은행의 수익성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국내은행의 '13년 중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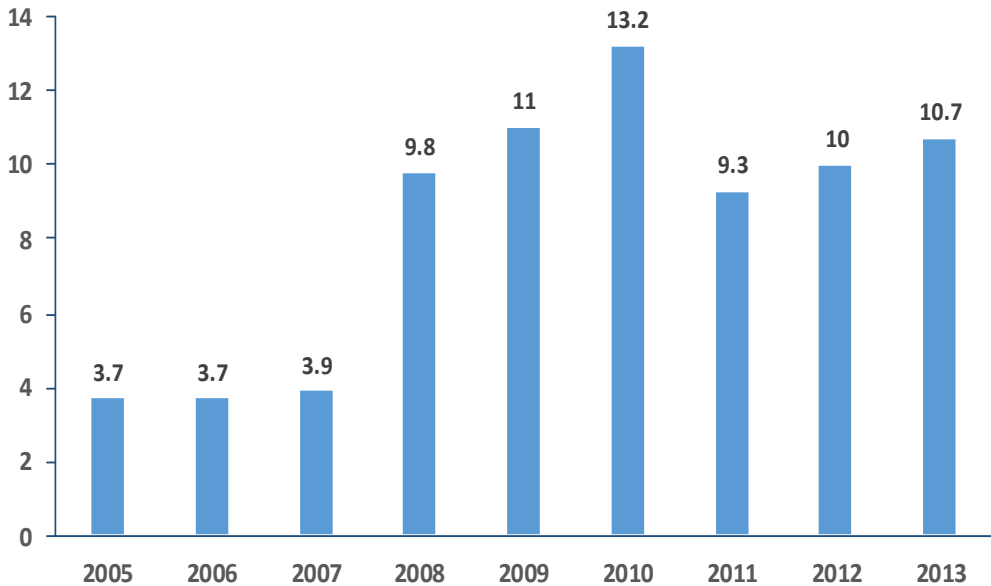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이토록 악화된 데에는 저금리로 인한 순이자마진 축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내경제의 저성장과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인한 대손비용의 증가도

2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지표인 대손상각비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2005~2007년 중 연간 4조원을 하회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연간 9.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13년까지 연간 9조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그림 2> 국내은행의 대손상각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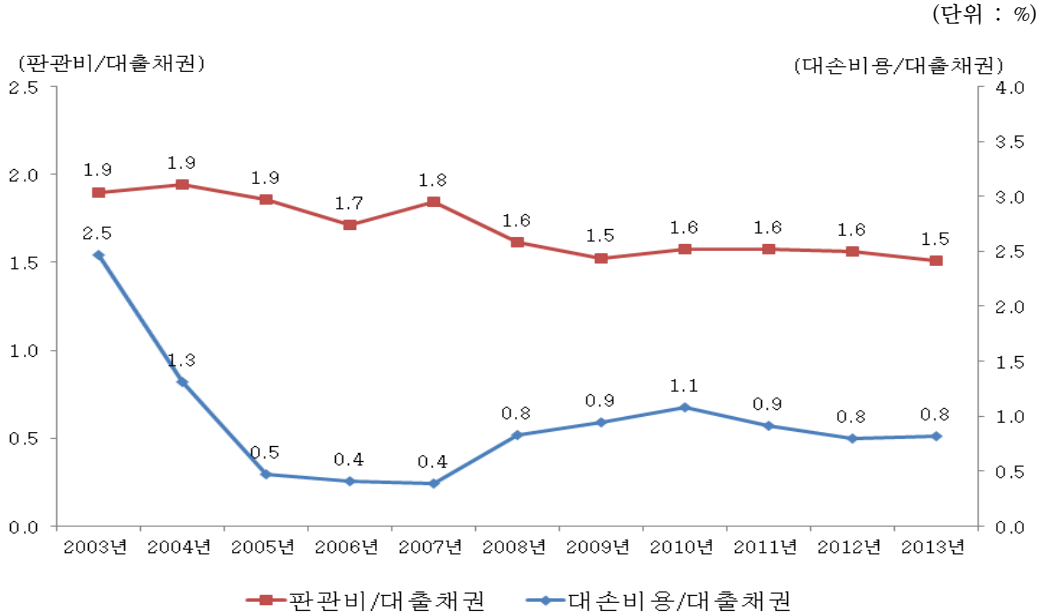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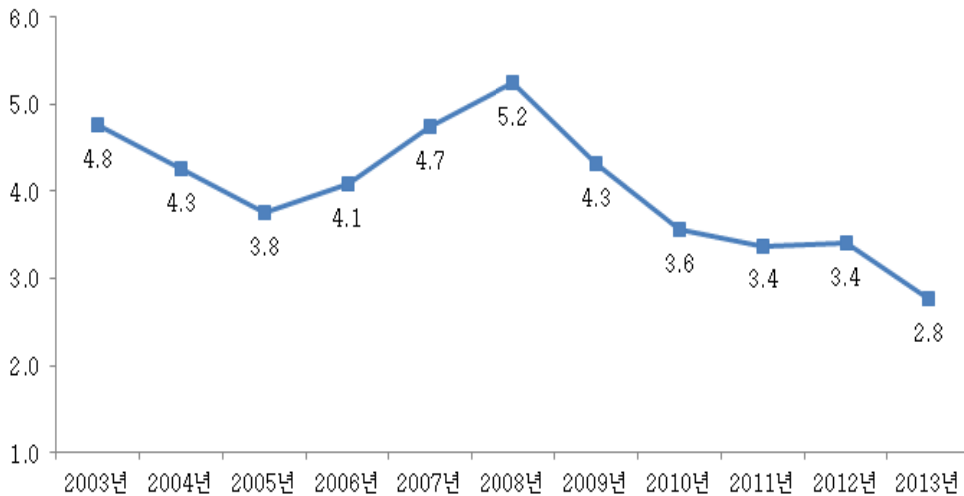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비용을 부문별로 살펴볼 경우 판관비와 이자비용의 대출채권 대비 비중은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이나 대손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국내은행의 판관비와 이자비용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대출채권 대비 각각 1.5%와 2.8%로 2007년(1.8%, 4.7%)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3년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대출채권 대비 0.8%로 2006~2007년(각 0.4%)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림 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판관비, 이자비용 추이



(단위 : %)

(이자비용/대출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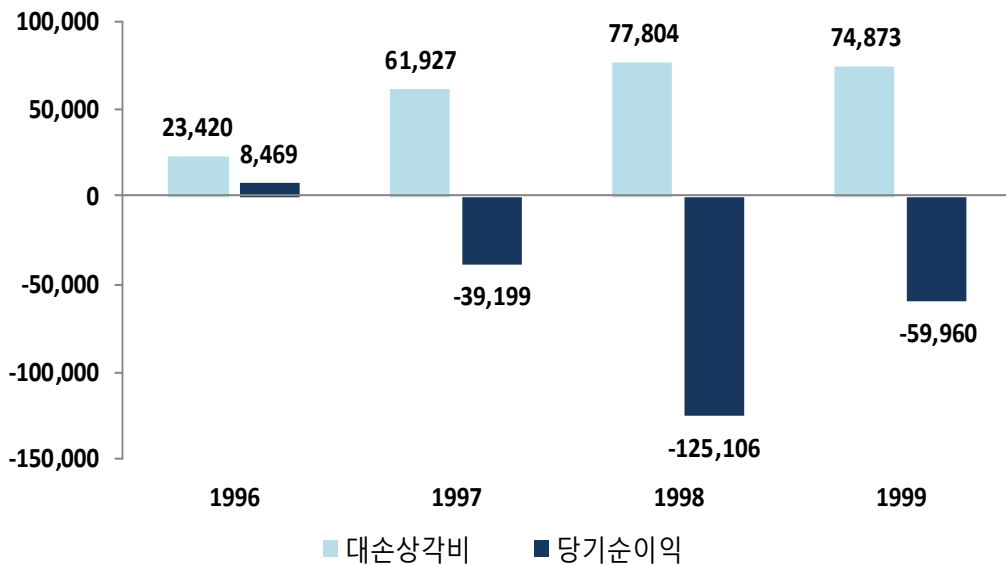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상 대손비용은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과거 외환위기 당시 대손비용 급증으로 인해 다수의 국내은행이 파산했던 경험이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7~1999년 국내 일반은행의 적자 규모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218.6조원에 달하였는데, 이렇듯 적자가 누적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동 기간 314.6조원에 달했던 대손비용에 있었다.

<그림 4> 외환위기 전후 국내 일반은행의 경영실적

(단위 : 십억 원)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렇듯 국내 경제의 저금리, 저성장 등으로 수익창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손비용이 급증하면 국내은행은 향후 또다시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상회하면서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이슈로 제기된 적이 있으며, 내수 및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다수의 건설사, 해운사, 조선사 등이 부도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조사를 통해 대손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손비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은행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수익성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대손비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부족하였던바, 대손비용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은행경영의 실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 보고서 집필의 목적이다.

Ⅱ장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손비용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후 Ⅲ장에서는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Ⅳ장에서 국내은행 대손비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Ⅴ장에서 대손비용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손비용의 개념 및 선행연구

1. 개념

통상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대손상각비¹⁾로 인식되어 왔으나 2011년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이후 'K-IFRS')을 도입한 이후에는 대손상각비와 대손준비금의 합계액을 대손비용으로 인식²⁾하고 있다.

대손상각비는 은행의 부실채권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손익계산서 상 기타비용으로 처리되며,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산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와 함께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게 된다. 이와 달리 대손준비금은 국내은행이 K-IFRS에 따라 추산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적립액 규모에 미달(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전입(환입)하는 계정이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감독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영업실적을 발표할 때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에서 법인세와 함께 대손준비금도 차감(추가)³⁾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령 아래의 <그림 5>와 같이 은행 A가 (t+1)기에 이자이익 4.5조원, 비이자이익 1.5조원을 거둔 가운데 3.0조원의 판매관리비와 2.5조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였다면 은행 A의 (t+1)기 영업이익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계인 6.0조원에서 판매관리비와 대손상각비의 합계인 5.5조원을 차감한 0.5조원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영업외손익 0.1조원을 거두고 법인세 0.4조원과 대손준비금 0.1조원이 발생할

1) 여기서 논의되는 '대손상각비'는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매각이나 채무재조정이나 여신정상화 등에 실패한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7>(계량지표의 산정기준)에서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계산시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은행이 K-IFRS에 따라 추산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경우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인 0.6조원에서 법인세⁴⁾비용과 대손준비금의 합계인 0.5조원을 차감한 0.1조원이 되는 것이다.

〈그림 5〉 손익계산서 상의 대손비용 예시

(t+1)기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0.5조원
이자이익	4.5조원(+)
비이자이익	1.5조원(+)
판관비	3.0조원(-)
대손상각비	2.5조원(-)
당기순이익	0.1조원
영업이익	0.5조원(+)
영업외손익	0.1조원(+)
법인세비용	0.4조원(-)
대손준비금	0.1조원(-)

영업이익 : 0.5조원

= 이자이익(4.5조원)+비이자이익(1.5조원)
-판관비(3.0조원)-대손상각비(2.5조원)

당기순이익 : 0.1조원

= 영업이익(0.5조원)+영업외손익(0.1조원)
-법인세비용(0.4조원)-대손준비금(0.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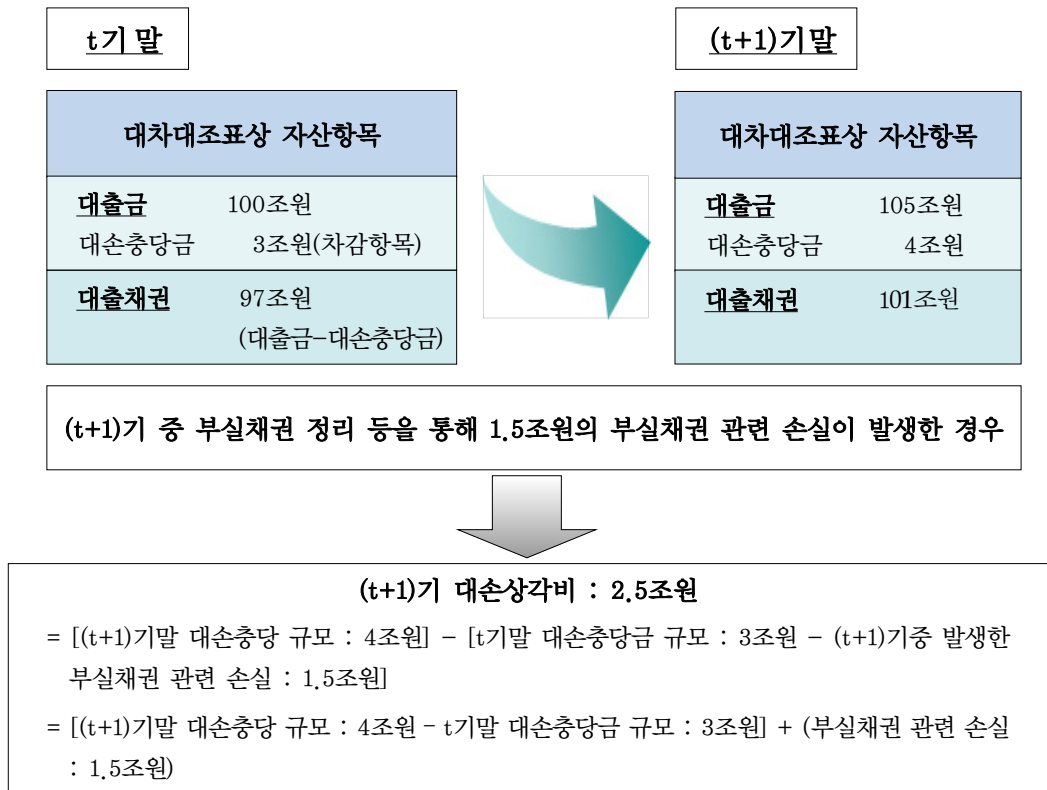
대손상각비는 과거에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도 불리어지던 항목이며, 기말 기준으로 계산된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위해 은행이 실제로 전입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가령 아래 〈그림 6〉 예시와 같이 A은행의 (t+1)기말 대출채권을 검토한 결과 4조원의 대손충당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은행 A는 t기말 3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바 있으며, t기말과 (t+1)기말 사이에 1.5조원의 부실채권 관련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t+1)기말 기준으로 은행 A가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그 전기에

4) 법인세는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대손준비금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적립했던 3조원에서 손실액 1.5조원을 차감한 1.5조원이 되며, 은행 A가 (t+1)기말에 필요한 대손충당금 4조원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4조원과 잔금 1.5조원의 차액인 2.5조원을 추가로 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6〉 대차대조표 상의 대손상각비 예시



대손상각비는 이번 기에 실제로 발생한 부실채권 관련 손실액과 다음 기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 관련 손실액의 합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부실채권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기존에 적립했던 대손충당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 금액은 다음 기에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대손상각비는 기존 부실채권 관련 손실 때문에 보충하는 부분과 함께 대출채권 구성요소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또는 감소)한 대손충당금 규모의 변화분도 반영하는 것이다.

가령 위 <그림 6>에서 은행 A의 대출금이 t기말 100조원에서 (t+1)기말 105조원으로 증가하고, 동기간 대손충당금 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⁵⁾ 하자. 이러한 경우 A은행의 t기말 대출채권 규모는 대출금(100조원)에서 대손충당금(3조원)을 차감한 97조원이며, (t+1)기말 대출채권 규모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101조원이다. 만약 t기말과 (t+1)기말 사이 은행 A에 1.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관련 손실이 발생한다면 (t+1)기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 규모의 증가분인 1조원과 (t+1)기 중 발생한 부실채권 관련 손실액 1.5조원을 합산한 2.5조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t+1)기에 발생한 부실채권 관련 손실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은행 A가 t기에 적립해 놓았던 대손충당금 중에서 손실액 1.5조원이 사용됨으로써 (t+1)기에는 동 금액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우리나라의 은행 대손충당금 제도 추이

시 기	내 용
1994년 6월 이전	- 총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적립
1994년 6월	-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감독당국이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제시하는 최저적립률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
1999년 12월말	- 자산건전성 분류에 Forward Looking Criteria 적용
2006년 12월말	- 예상손실액(expected loss)과 감독규정상 적립액을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Max[최저기준, 예상손실])으로 적립 - 최저적립률은 상향 조정
2008년 1월	- Basel II 시행
2011년 1월	- K-IFRS 도입으로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을 발생손실모형에 기반해 평가하고 적립 - 기존 산정방식보다 적립액이 감소한 경우 동 차액은 대손준비금(자본항목)으로 적립

자료 :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한국은행, 2014)

5) 통상 대출채권 규모가 증가(감소)하면 필요 대손충당금 규모도 증가(감소)하며, 대출채권 규모가 변하지 않아도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개선)되거나 대출포트폴리오가 악화(개선)되면 필요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감소)하게 된다.

대손상각비의 계산을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위 <표 1>과 같이 변화하였다. 1994년 이전 국내은행은 총대출금에서 감독당국이 정해주는 일정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규모는 대출금 규모에 정비례하였다. 1994년 6월 감독당국은 각 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분류한 대출채권의 각 자산건전성 등급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동 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적립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가중치는 감독당국이 경험손실률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었으므로 대손충당금의 규모는 각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손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 외에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 12월말부터는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 이하 'FLC')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연체기간 외에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은행의 평가도 대손충당금의 규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동시에 일부 은행은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가중치가 아닌 7년(BIS 권장)치 자사의 손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된 적립률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대손충당금의 규모는 과거 손실률에 대한 각 은행의 추정치에도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자의성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당국은 2006년 12월말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예상손실액(expected loss)과 아래 <표 2>에 제시된 감독규정 상의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는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적게 적립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나 국내은행이 조세회피 등을 위해 임의로 많이 적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산을 시장가(market price)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11년부터 모든 국내은행이 K-IFRS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때부터 대손충당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각 은행이 K-IFRS에서 정한 발생손실 모형(incurred losses model)을 이용하며, 동 모형을 기초로 계산된 향후 1년간의 손상(impairment)액이 대손충당금이 되었다. 한편 각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표 2〉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기준

(단위 : %)

구 분	기 업	가 계	신용카드	
			카드대출자산, 리볼빙자산	기타 카드자산
정 상	0.85 ¹⁾	1	2.5	1.1
요 주 의	7	10	50	40
고 정	20	20	65	60
회수의문	50	55	75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주 : 1)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100분의 0.9 이상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

대손비용의 또 다른 요소인 대손준비금은 국내은행이 발생손실 모형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감독당국이 제시한 최저 적립기준에 따라 계산된 최소적립액과의 차액이므로 대손준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의 최저 적립기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의 최저 적립률은 위 〈표 2〉와 같이 은행 자산의 건전성 분류별로 정해져 있는데,⁶⁾ 가령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기업대출이면 0.85%, 가계대출이면 1%, 카드대출이나 리볼빙대출이면 2.5%, 기타 카드자산이면 1.1%를 적립해야 한다.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부실의 정도에 따라 적립률이 다른데, 가령 기업대출의 경우 ‘고정’ 자산은 20%, ‘회수의문’ 자산은 50%, ‘추정손실’ 자산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6) 참고로 〈표 2〉에서 나타난 적립률 외에도 지급보증, 미사용약정 등에 대해서도 적립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최저 적립기준은 감독당국이 과거 손실률에 기반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적립률 수치는 감독규정 개정 시 변경된다.

여기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 분류는 감독당국의 기준에 따르는데, 국내은행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및 <별표 3>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유 자산⁷⁾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보유자산은 '정상'으로 분류되며, 1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권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면 '요주의'로 분류⁸⁾되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담보가치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더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까지는 '고정'으로 분류된다. '회수의문'부터는 담보물을 처리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인데, '회수의문'은 연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이고 '추정손실'은 연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1999년 FLC를 도입한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은 연체기간 외에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기준에 의해서도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아래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부도업체, 파산이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폐업 중인 업체, 법정관리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 그 밖에 채무상환능력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의 여신 등은 연체여부와 관련 없이 고정 이하의 부실여신으로 분류된다.

7) 자산건전성 분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에 따라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가계대출, 미수금, 카드채권, 미수이자 등이다.

8) '요주의'까지는 아직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실채권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포함한 '고정이하' 여신의 비율을 사용한다.

〈표 3〉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방법

구 분	채무상환능력 기준	연체기간	부도 여부 등
정 상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
요 주의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1월 이상 3월 미만	-
고 정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3월 이상	최종부도 발생, 파산·청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부분
회수의문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 이상 12월 미만	-
추정손실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 이상	최종부도 발생, 파산, 청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자료 : 금융감독원(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3>)

한편 각 은행이 K-IFRS에서 규정한 발생손실 모형으로 계산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는 통상 금감원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계산한 대손충당금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은 주로 양(+)의 값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금감원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계산한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이 음(-)의 값을 가지기도 한다. 2011년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

2. 선행연구

은행의 대손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의 규모에 대한 각 은행의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 즉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회계장부 상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지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다 해당은행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진들은 자사의 자본적정성, 경영실적, 주가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손충당금 규모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편법행위이며,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가 취해져 왔다.

우선 ‘자본관리 가설(capital management hypothesis)’에 의하면, 은행의 경영진들은 자본적정성 지표의 관리를 위해 대손상각비 규모(=대손충당금 전입규모)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가령 Moyer(1990)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하지 못한 은행일수록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유인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1981~1986년 미국은행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규제수준 자기자본비율)이 대손충당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대손충당금이 은행의 자기자본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대손충당금의 규모에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관리 가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이하 ‘BIS’)은 1990년부터 자기자본을 기본자본(Tier 1 Capital)과 보완자본(Tier 2 Capital)으로 구분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손충당금의 전입을 통한 자기자본 비율의 조정 행위를 통제하고자 위험가중 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Ahmed(1999)는 BIS의 이러한 결정이 자본관리 가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1986~1995년 미국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BIS 자기자본비율과 여전히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Ahmed(1999)의 연구에서 1991년 미국에서 BIS 변경안을 발표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발표 이후 상관계수와 통계적 유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또 다른 가설로는 ‘수익평준화 가설(earning smoothing hypothesis)’이 있다. 이는 은행의 경영진이 수익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손상각비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가설이다. 즉 경영진은 은행의 수익률 목표가 있으며, 수익률이 목표보다 좋을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여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수익률이 목표보다 나쁠 때에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여 수익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수익률에 집착하는 이유로는 조세 회피, 책임기간 연장 등이 있는데,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은행의 법인세는 물론 은행장의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재계약이 어려워지게 된다. Collins, Shackelford, Wahlen(1995)은 1971~1991년 미국은행 데이터를 통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당기순이익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Beatty, Chamberlain, Magliolo(1995)는 1986~1989년 미국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대손충당금 규모와 당기순이익 규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Fonseca, Gonzalez(2008)는 1995~2002년 40개국 은행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수익평준화 가설이 맞는 국가와 맞지 않는 국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Fonseca, Gonzalez(2008)는 회계공시 제도가 발달되고 은행에 대한 감독체계가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으로 수익성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 가설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대손충당금의 규모와 관련된 마지막 가설은 ‘신호 가설(signalling hypothesis)’이다. 이는 은행의 경영진이 필요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가설이다. 즉 주가 관리를 중요시하는 경영진들은 당장의 당기순이익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대손충당금을 높게 적립함으로써 해당은행의 향후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Wahlen(1994)은 1977~1988년 미국은행 데이터를 사용해 대손충당금 수준이 미래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반면 Docking, Hirschey, Jones(1997)가 1985~1990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은행들의 주가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으며, 대형은행보다 중소형은행에서 동 현상이 더 심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는 대손충당금 전입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투자자들이 이를 미래의 양호한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

대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의 대손비용과 관련된 연구는 대손충당금 규모의 재량적 산정과 그 전략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효순(2003)은 1995~2000년 국내에서 상장된 은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이 비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을 증가시키면 주가가 떨어지나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전입을 증대시키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발표하였으며, 문현주(2005)도 1995~2003년 국내 상장은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재량적 대손충당금과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의 구분, 자산건전성의 임의적 분류에 대한 판단 등에 연구자의 '재량'이 들어가는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을 조정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배수현·김종두(2012)는 2001~2011년 국내은행 자료를 토대로 재량적 대손충당금을 측정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총자산이익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자본적정성이 열악한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을 늘렸으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목표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을 늘린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재량적 대손충당금과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의 분류 문제가 있으며, 대손충당금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의 특징과 대손충당금의 결정요인이 혼재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총자산이익률이 높을 경우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총자산이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¹⁰⁾

한편 대손비용의 개념에 관한 이전 장(chapter)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대손충당금 적립규모와 감독규정에서

10) 기존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을 건전성 지표로 회귀분석한 이후 건전성 지표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의 절대적 규모가 수익성이나 자기자본비율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대형은행의 특징에 기인할 수 있다. 가령 통상 대형은행은 독과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형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 있으며, 기업대출과 유가증권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형은행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 수 있다.

제시한 최저적립률에 따라 계산된 규모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규모가 감독규정에서 제시한 최저적립률에 따라 계산된 규모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들에 비해 대손충당금의 수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¹¹⁾ 또한 국내은행의 경영진들은 대부분 전문 경영인이나 전직 관료로서 해당 은행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조작 유인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학술적 목적의 기존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대손비용의 전략적 선택보다는 대손비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대손비용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정책 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11) 단, 국내은행의 경영진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교체된 경우 신규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전임 경영진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특정 은행의 경영진이 부임 첫 해에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Ⅲ.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및 국제비교

1.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현황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16.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3.7조원까지 감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8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표 5〉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추이

(단위 : 조원, %)

연 도	대손상각비 (A)	대손준비금 (B)	대손비용 (A+B)	이자이익 (C)	(A+B)/C
2002	11.0	0	11.0	23.9	46.0
2003	16.8	0	16.8	23.6	71.2
2004	9.2	0	9.2	20.5	44.9
2005	3.7	0	3.7	27.9	13.2
2006	3.7	0	3.7	29.8	12.3
2007	3.9	0	3.9	31.9	12.2
2008	9.8	0	9.8	35.1	27.8
2009	11.2	0	11.2	33.7	33.3
2010	13.2	0	13.2	38.5	34.3
2011	9.3	2.7	12.0	40.7	29.5
2012	10.0	0.7	10.7	39.1	27.4
2013	10.7	0.6	11.3	36.2	31.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손비용이 증가할 때에는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화되었다.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2003년 18.7조원을 기록한 이후 2007년 7.7조원까지 감소했으나 2008년 14.7조원으로 급증한 이후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제기된 2010년에는 24.8조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8조원대로 감소했다가 2013년말 현재 25.8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고정이하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6%에서 2007년 0.7%까지 하락했다가 2008년 1.1%에 이어 2010년 1.9%로 상승했으며, 2012년 1.3%까지 하락했다가 2013년말 현재 1.8%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대손충당금,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카드대란 수준으로 악화되었을지라도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카드대란 당시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대손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데다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2013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은행 대손비용의 국제비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평균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Bankscope에 게시된 주요국 10대 은행

〈표 7〉 대손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영 국	독 일	프랑스	G6 평균
대손상각비 (Loan Loss Provisions)	680	336	2,653	708	4,218	701	1,410	1,671
대손상각비/대출채권 (Loan Loss Prov/ Gross Loan)	0.77	0.11	0.77	0.30	1.23	0.45	0.38	0.57

주 : 1) 2012년 각 국가 10대 은행(총대출금 기준) 평균
자료 : Bankscope

(총대출금 기준)의 2012년 대출채권 대비 대손상각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0.77%로 유럽 재정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영국(1.23%)보다 낮았으나 일본(0.11%), 캐나다(0.30%), 독일(0.45%), 프랑스(0.38%) 등에 비해 높았으며, 주요 6개국 평균(0.57%)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캐나다와 일본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뱅커지(The Banker)에 게시된 주요국 10대 은행(총대출금 기준)의 2012년 무수익여신 비율(무수익여신/총여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39%로 캐나다(0.81%)와 일본(1.30%)에 이어 낮았으며, 우리나라보다 대출채권 대비 대손상각비 비중이 낮은 독일(3.83%)이나 프랑스(3.80%)보다도 현격히 낮았다.

〈표 8〉 무수익여신¹²⁾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영 국	독 일	프랑스	G6 평균
무수익여신비율 (Non-Performing Loan Ratio)	1.39	1.30	3.73	0.81	4.12	3.83	3.80	2.71

주 : 1) 2012년 각 국가 10대 은행 평균
자료 : The Banker(2013.7)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대손비용이 국제적으로 높은 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10대 은행의 2012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102.7%로 미국(75.6%), 일본(56.0%), 캐나다(85.4%), 영국(47.6%), 독일(60.0%), 프랑스(66.2%)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

12)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며,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 여신, 채권재조정 여신 등 우리나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기준에 의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무수익여신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9〉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국제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영 국	독 일	프랑스	G6 평균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Loan Loss Res/Gross Loans)	1.48	0.98	2.13	0.60	4.91	1.90	2.79	2.12
대손충당금 적립률 (Loan Loss Res/Impaired Loans)	102.72	56.01	75.57	85.44	47.58	59.99	66.17	65.12

주 : 1) 2012년 각 국가 10대 은행(총대출금 기준) 평균

자료 : Bankscope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자본적정성의 향상이나 수익평준화를 위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적정성 가설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이 매우 낮을 때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2012년 국내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기본자본/총자산)은 평균 7.2%로 해외 주요국 평균 수준이었다. 또한 수익평준화 가설에 의하면,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매우 높을 때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2012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7%로 주요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10〉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의 국제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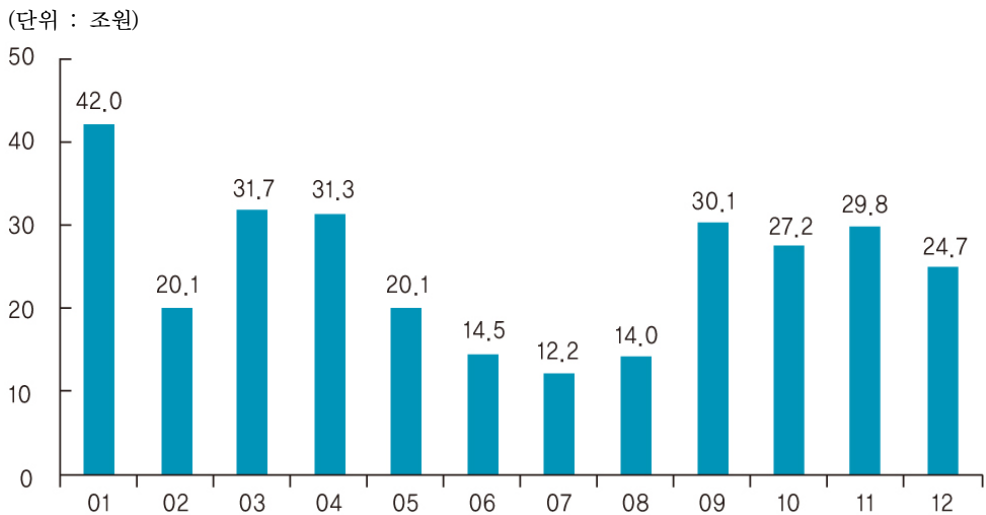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캐나다	영 국	독 일	프랑스	G6 평균
기본자본 비율 ¹⁾ (Capital assets Ratio)	7.2	4.9	7.8	4.9	6.7	4.0	14.6	7.2
총자산이익률 (ROA)	0.7	0.5	0.9	1.1	0.4	0.2	0.6	0.6

주 : 1) 기본자본 비율=Tier 1 Capital/Total assets

자료 : The Banker

이 외에도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은행이나 감독당국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면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 2012년 국내은행 및 감독당국에서 우리나라의 2013년 경제상황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¹³⁾된다. 실제로 2013년 1~11월 중 423개의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고 동기간 무려 9만 6천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부도율 증가로 국내은행의 2013년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림 7〉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규모



자료 :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이재연, 2013)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대손비용이 큰 또 다른 이유는 국내은행이 건전성 지표의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감독당국의 지도나 은행 자체의 판단에 따라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경우 부실채권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을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감독당국의 건전성 지표에 대한 기준

13)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산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감독당국이 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 강하며, 이것이 국내은행의 적극적 부실채권 정리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003년 31.7조원에서 2007년 12.2조원으로 감소했으나 2009~2012년 중 연간 24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표 1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식

정리방식	주요 특징
대손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능채권 재무제표상 손실처리 · 전통적 방식, 경영지표 악화 · 특수채권 관리로 추후 손실금 회수
여신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추적, 담보물 처분 등 활용, 전통적 방식 · 회수조직 활용, 자금운용 제약 · 보증대출의 경우 부실발생시 보증기관에 청구(보증기관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 확보)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S(최근에는 true sale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용), CRC·AMC 등에 개별매각 · 사후관리 부담 완화, 유동성·수익성 개선
채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원금 감면 등 · 부실채무자에게 회생기회 제공
여신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조정, 경기호전에 따른 정상화 · 부실 기업여신, 카드론 등의 대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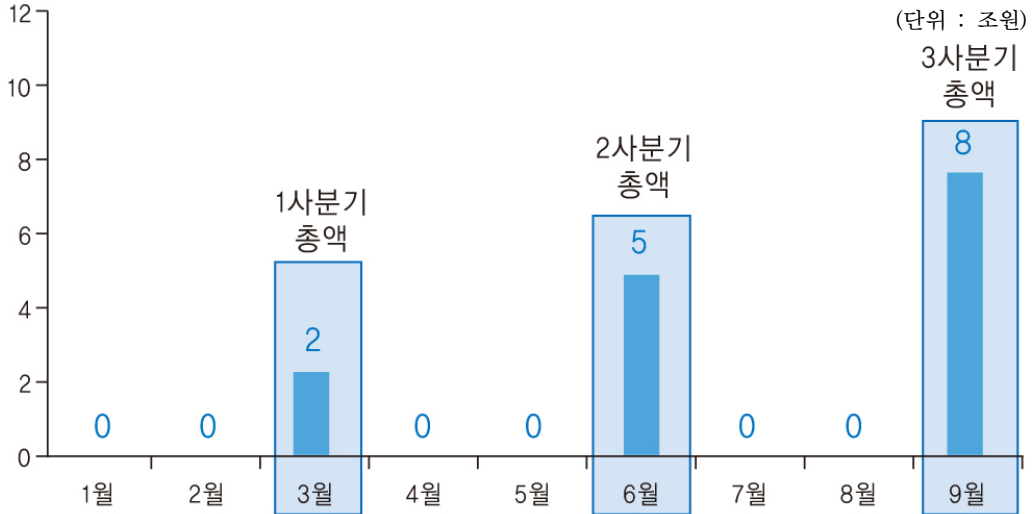
자료 :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과제」(이재연, 2013)

한편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은행의 재무제표에 손실로 처리되는 대손상각 외에도 위 〈표 11〉에서 보듯이 여신회수, 매각, 채무조정, 여신정상화 등 부실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¹⁴⁾ 따라서 국내은행의 실제 대손비용은 부실채권 정리 규모보다 현저히 작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처리는 아래 〈그림 8〉에서 보듯이 매분기 말에 처리되며, 이로 인해 아래 〈그림 9〉에서 보듯이 월 단위로 발표되는 국내은행의 연체율 지표가 매분기의 마지막 달마다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나 연체율 등과 같은 건전성 지표만 살펴볼 경우 국내은행의 건전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대손상각비와 대손준비금 등 대손비용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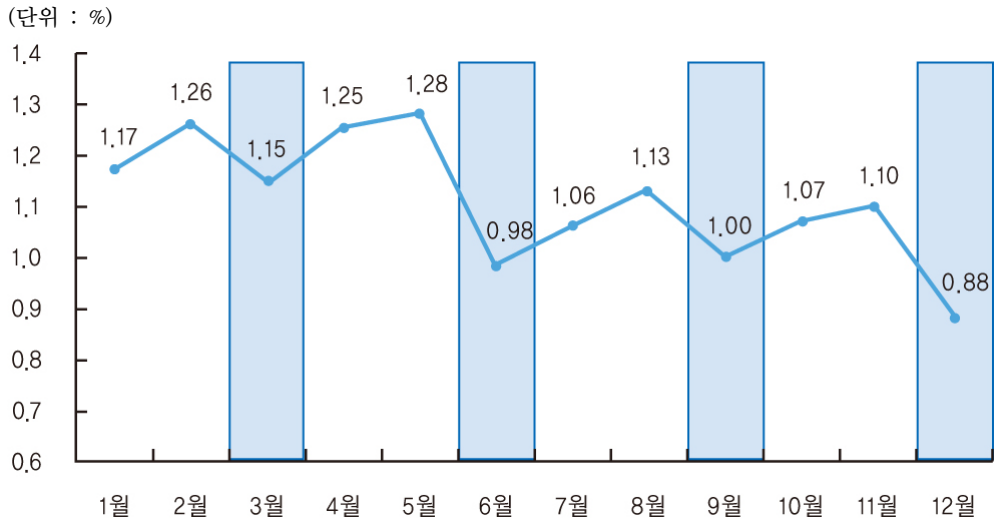
14)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방식 중 대손상각이 1/3 정도로 가장 크며, 최근에는 매각, 담보처분, 여신정상화 순으로 정리되고 있다(이재연, 2013).

〈그림 8〉 2013년 국내은행의 대손상각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9〉 2013년 국내은행의 연체율 추이



주 : 1) '13.12월은 잠정치
2)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지도 하에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대손을 적극적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 축소, 수수료수입 감소 등으로 국내은행의 수익기반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손비용이 계속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 국내은행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건전성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은행의 적립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내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문턱을 높이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수익성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IV. 대손비용의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모형과 변수

가. 모형과 추정방법

1) 대손비용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개별은행의 경영지표와 함께 각종 더미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아래의 식(1)과 같다.

$$y_{it} = \beta_0 + X_{it}'\beta_1 + D_t'\beta_2 + \alpha_i + \epsilon_{it} \quad (1)$$

식(1)에서 y_{it} 는 은행 i 의 t 기 종속변수로서 이후 설명하듯이 대손비용 비중, 실손비용 비중, 예상대손비용 비중 등 세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X_{it} 는 대출증가율, 대출포트폴리오, 순이자마진, 비이자수의 비중 등 은행 i 의 t 기 대손비용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 벡터로서 선행연구와 국내은행 실정을 감안하여 고안되었다. D_t 는 독립변수 외에 은행 i 의 t 기 대손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벡터이며, 거시경제 상황, 금융시장 상황, 금리, 부도율 등 각 연도의 특징을 대변하는 t 기 연도 더미변수와 함께 시장점유율, 지방은행 더미 등 대손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의 특징변수도 추가되었다. α_i 는 조직문화와 대출심사 역량 등 수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은행의 특성들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우선 식(2)와 같이 대손상각비와 대손준비금의 합계가 해당은행의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대손비용 비중을 사용하였다. 2011년 이전에는 대손준비금 제도가 없었으나 이전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기준으로 계산한 대손상각비와 새로운 기준으로 계산한 대손상각비의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합산하기 때문

에 대손상각비와 대손준비금을 합산해야 2011년 이전과 이후의 대손비용이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고로 대손비용을 대출채권으로 나누는 이유는 대출채권의 규모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의 자연증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text{대손비용 비중} = \frac{(\text{대손상각비} + \text{대손준비금})}{\text{대출채권}} \quad (2)$$

그러나 은행의 대손비용은 대손비용의 개념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향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증감분과 과거의 부실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부실채권 관련 비용이 합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 II장 1절에서 설명했듯이 대손상각비는 해당 기간에 실제로 투입된 대손충당금과 같은데, 이는 향후 1년간의 대손비용 증감이 예상되어 반영된 대손충당금의 증감분과 해당 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대손비용이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기말(t+1) 기준으로 계산된 향후 1년간의 대손비용이 지난 기말(t) 기준으로 계산된 향후 1년간의 대손비용과 다르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을 '예상 대손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대손비용의 자연증가분을 통제하기 위해 식(3)과 같이 예상 대손비용 비중이 사용되었다. 대손충당금 증감분에 대손준비금 증감분까지 합산한 이유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증감분을 합쳐야 2011년 이후의 데이터가 2003~2010년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text{예상 대손비용 비중} = \frac{\text{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증감분}}{\text{대출채권}} \quad (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비중에서 예상 대손비용 비중을 제외할 경우 해당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대출관련 손실이 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실손비용 비중'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실손비용 비중은 본 보고서에서 식(4)와 같이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예상 대손비용 비중과 실손비용 비중의 결정요인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대손비용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기로 한다.

$$\text{실손비용비중} = \text{대손비용비중} - \text{예상대손비용비중} \quad (4)$$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표본은행(2003~2012년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대비 대손비용은 아래 <표 12>에서 보듯이 평균 0.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8%였다. 예상 대손비용 비중은 평균 대출채권 대비 0.07%에 불과했으며, 실손비용 비중은 평균 0.80%였다. 예상 대손비용 비중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실손비용 비중에 비해 작다는 것은 은행들이 다음 해의 대손을 예상하여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변화 폭이 실제 발생하는 대손비용의 변화에 비해 작다는 의미이다.

한편 대손비용 비중과 달리 예상 대손비용 비중과 실손비용 비중은 음(-)의 값도 상당수 있었다. 예상 대손비용 비중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에 예상한 대손충당금과 올해 예상한 대손충당금의 격차를 대출채권으로 나눈 것이므로 지난 1년보다 향후 1년의 경영환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¹⁵⁾ 실손비용은 대손충당금을 충당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여신정상화 등으로 지난 1년간 회수된 부실여신 규모가 지난 1년간 대손상각 방식으로 손실 처리된 여신보다 많을 경우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¹⁶⁾

<표 12> 표본은행의 대손비용 통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손비용 비중	0.87	0.8	0.0	6.6
예상 대손비용 비중	0.07	0.54	-3.51	2.97
실손비용 비중	0.80	0.83	-1.88	5.94

15) 가령 2004년 외환은행은 예상 대손비용이 대출자산 대비 -3.51%를 기록(최소값)하였는데, 이는 자산 건전성 개선과 실적 호전 등으로 대손충당금 규모를 2003년 대비 61% 줄였기 때문이다.

16) 2012년 광주은행은 실손비용이 대출자산 대비 -1.88%(최소값)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부실대출의 대출기간 연장 시 여신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정상화되는 여신의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신규로 발생하는 부실여신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2) 대손비용 관련 전략적 요인 분석

본 보고서의 II장 2절에 설명된 선행연구에서는 은행의 경영진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의 기본 원칙과는 무관하게 대손충당금 수준을 편법적으로 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우선 수익평준화 가설에 따르면, 은행의 경영진들은 수익이 많이 발생한 때에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하며, 수익이 적게 발생한 때에는 본인들의 해고를 면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수준 이하로 적게 적립한다. 또한 자본관리 가설에 따르면, 자본적정성이 낮은 은행의 경영진들은 자본적정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최근 국내은행의 실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선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일 수 없도록 대손충당금을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완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규모도 제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수준이 정해져 있었으며, 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개별은행이 감독원 기준과 다르게 적립할 경우 대손준비금을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은행의 경영진이 자의로 대손충당금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결국은 감독원 기준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쌓거나 덜거나 하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감독원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FLC의 도입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의 분류에 어느 정도의 자의성이 들어가므로 경영진이 자산건전성의 분류과정에 개입하여 대손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특히 감독원의 기준은 최소적립률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적립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임한 일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부임 첫 해에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⁷⁾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수익평준화 가설과 자본조정 가설을 검증하며, 이를 위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예상 대손비용 비중을

17) CEO로 부임하자마자 대손충당금을 높게 적립하면 부임 첫 해 경영실적이 매우 나빠지는데, 이것을 전임 CEO의 탓으로 돌리고 그 이후의 상대적 성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수익성, 자본적정성, CEO 교체 더미변수 등으로 회귀분석하였다.

한편 패널데이터를 추정할 때에는 α_i 를 처리하기 위해 임의효과(random effects)나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같은 가정을 도입한다. 임의효과의 경우 α_i 가 X_{it} 와 독립적($E(\alpha_i|X) = 0$)이라는 가정 하에서 잔차항의 분산을 이용하여 최소자승회귀 분석(OLS)을 실시한다. 반면 고정효과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정이 없이 평균을 차감한 이후 식(3)에 대하여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실시한다.

$$y_{it} - \bar{y}_i = (X_{it} - \bar{X}_i)\beta + (u_{it} - \bar{u}_i) \quad (3)$$

주 : \bar{X}_i 는 X_{it} 의 시간평균(time average)

패널모형 분석에서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하우스만 검정(Wu-Hausman Test)을 실시하는데, 이는 α_i 와 X_{it} 가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하우스만 검정이 기각될 경우에는 α_i 와 X_{it} 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를 가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우-하우스만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1) 대손비용 분석

가) 대출 증가율과 명목 GDP 성장률 간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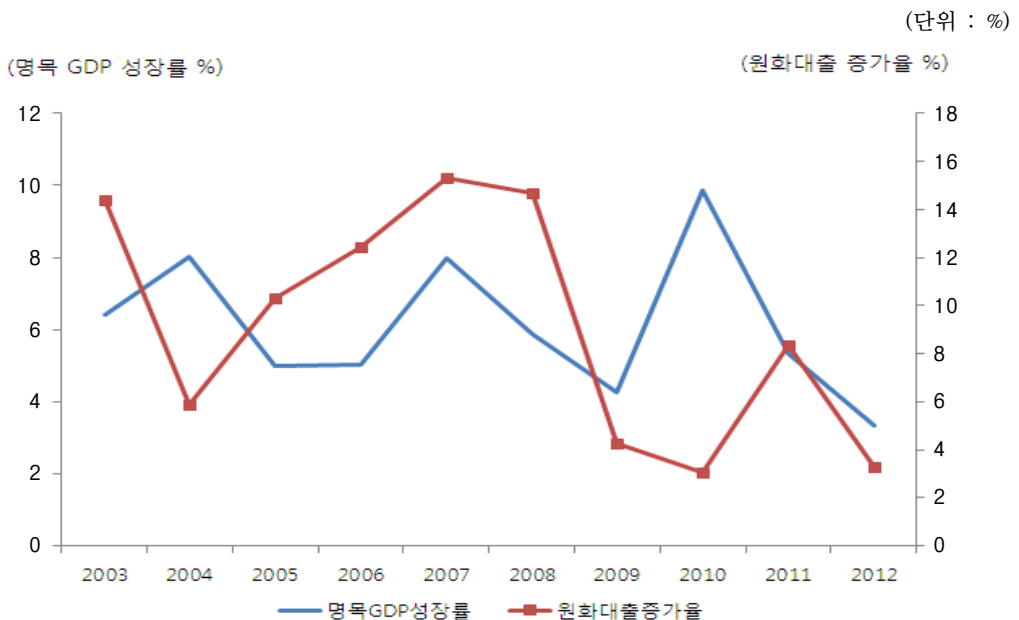
2005~2008년 국내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국내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을 대폭 상회하면서 과다대출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율은 아래 <그림 10>에서 보듯이 2005년 8.5%, 2006년 12.4%, 2007년 15.3%, 2008년 14.7% 등으로 동기간 명목 GDP 성장률인 4.0%, 5.0%, 7.9%, 5.9%를 현격하게 상회하였다. 이는 2002년부터의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주택시장 활황 및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대형은행들의 외형경쟁 및 군집행위(herding behavior)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학계와 언론은 물론 감독당국에서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나타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급증 현상이 당시의 대출경쟁 후유증 때문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는 대손비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출자산의 급증은 대손비용의 분모이자 고정이하여신비용의 분모인 대출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손비용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¹⁸⁾ 본 보고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와 그 이전 연도의 격차도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그림 10〉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증가율 및 명목GDP 성장률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8) 우리나라는 대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계약기간(주로 1~2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든지 대출을 연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부실채권이 1~2년 후에 발생하게 된다.

한편 2005~2007년 중 급격히 증가하던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은 2008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 자본적정성 산정기준의 변경과도 관련이 있다. 2008년 정부는 신용리스크 외에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도 반영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필요한 위험가중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바젤 II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식이 선진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외형경쟁 유인이 줄어들었다.

〈표 13〉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추이

		내 용
2008.1	바젤 II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등급법 적용 가능 ·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 반영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
2008~2009	바젤 I · 바젤 II 병행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지 바젤 I 과 바젤 II 중 높은 비율을 적용

나) 대출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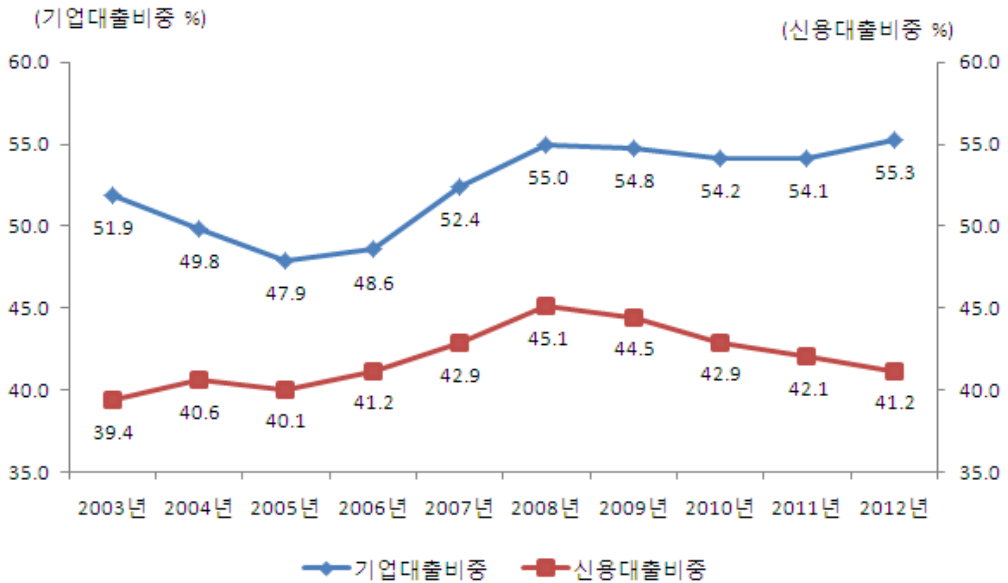
대손비용에는 대출 포트폴리오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손이 발생할 확률에는 대출자의 신용, 경제능력, 담보자산의 가치 등이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조업대출과 건설업대출 등도 대손 확률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대출의 포트폴리오가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에 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출 비중과 신용대출 비중 등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기업대출의 경우 통상 가계대출에 비해 부도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부대출에 비해 담보의 부재로 인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중 기업대출의 비중은 2003년 51.9%에서 2005년 47.9%까지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2년말 현재 55.3%에 달하고 있다.

반면 국내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2003년 39.4%에서 2008년 45.1%까지 확대되었으나 2009년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2년말 현재 41.2%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11〉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및 신용대출 비중

(단위 : %)



주 :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은 원화대출 대비 비중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사실 국내은행의 대출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대출 위주였으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의무비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5%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982년에 제정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에 따라 시중은행은 원화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지방은행 60%, 외국은행 국내지점 35%)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대출한도 감축, 기존대출금 회수,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으로 중소기업대출비율이 미달되면 총액한도 대출의 한도를 100% 삭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시설자금 대출 지원과 Fast Track 지원 등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표 14〉 기업대출 관련 한국은행의 정책 추이

		내 용
2004.7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 · 준수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추가배정비율은 현행 100% 이내에서 200% 이내로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 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
2005.7	중소기업시설자금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자금운용상황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증가실적'을 포함 · 총액한도(5.0조원) 지원대상자금에 무역금융, 기업 구매자금 등을 포함
2008.11	중소기업 Fast-Track 프 로그램 연계 특별지원한 도(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유도 · 도입 당시 한도는 1조원이었으며, 2009.3월 2조원으로 증액 · 운용하여 오다가 2011.1월 1조원으로 감축
2012.2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중 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신용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운용

그러나 외환위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가 줄고 잔존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은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위주로 자산을 늘려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2005년 47.9%까지 축소되었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은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졌으며, 아래 〈표 15〉에서 보듯이 감독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에서 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했으며,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기업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

2009년 중에도 투기지역의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과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강화,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차주 당 1건으로 축소,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의 건전성 및 수익성 위주 개편, 총 부채상환비율(DTI)의 수도권 지역 확대 등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¹⁹⁾

〈표 15〉 가계부채 관련 감독당국의 정책 추이

		내 용
2005.6~8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신규취급 금지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60%→40%)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APT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 · 대출을 받아 3채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
2006.11.15.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
2006.12.20.	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유도 ·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을 축소하도록 유도
2007.1.1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유도 ·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
2009.9.7.	은행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 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

19)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부진에 빠지자 2011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에 대한 DTI 가산 점 부과, DTI 면제대상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 취득세율 감면, 젊은층의 장래소득 인정, 보유자산의 소득 인정 등 가계대출 장려 정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내 용
2011. 3. 22.	주택거래 활성화 기조 유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 '1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 ·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
2011. 6. 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 주택담보대출(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 예대율 100%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 말까지 1년 6개월 단축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2012. 7. 19.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충당금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적립토록 유도 ·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
2012. 8. 17.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 하에 소득으로 인정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내은행이 기업대출을 적극 취급하면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비율은 2006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8년 55.0%에 달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기업대출 비중은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아래 <표 16>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설, 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도입,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특별 예대상계, 보증운영 비상조치 등 각종 기업대출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Fast Track은 신청 기업을 A, B, C, D로 분류하여 A나 B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1개월 이내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예대상계는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예금액만큼 대출액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표 16〉 기업대출 관련 감독당국 정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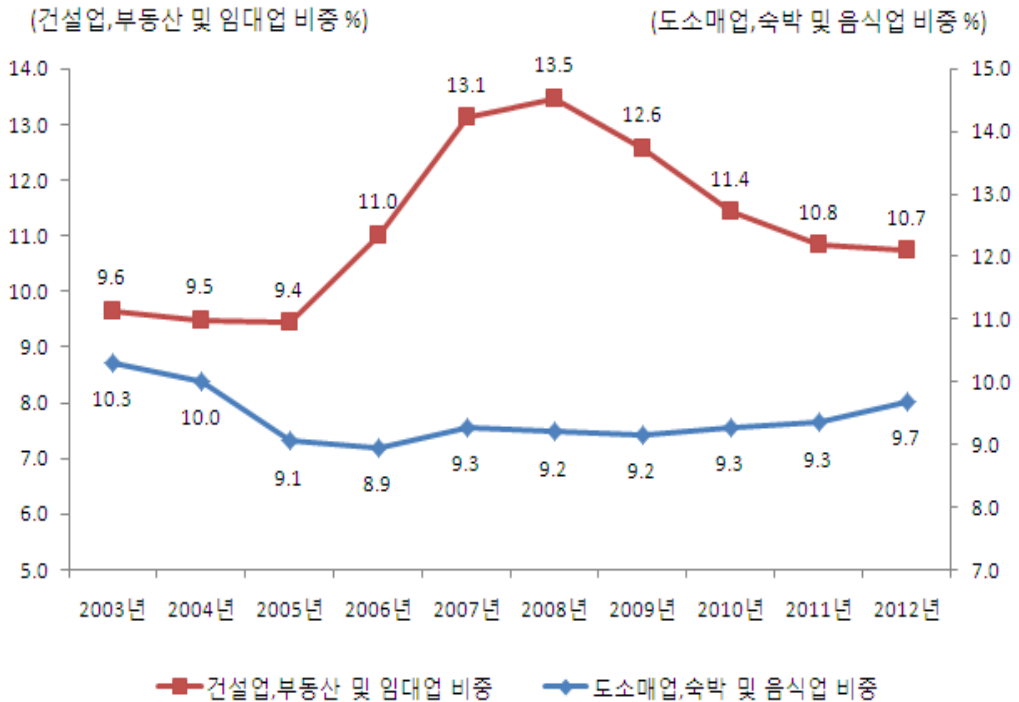
		내 용
2008.9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설	· 은행이 금융애로 사항을 수용하여 자금을 지원
2008.10	Fast Track(유동성 애로기업특별지원 프로그램)	·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을 A,B,C,D등급으로 구분 · 부실 징후가 없는 A,B등급 기업은 지원 요청 1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과 이자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의 지원 · 키코 피해 기업은 최대 20억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부실 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
2008.11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 ‘회생절차 등 진행 중인 건설사·조선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 ·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 ·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2008.1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 실시	· 국내 17개 은행(수출입 제외)이 모두 참여 · 중소기업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예·적금과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계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
2009	한시적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	· 매출감소·차입증가를 반영하여 ‘심사저촉기준’ 완화(신보) ·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보증지원이 가능(신보) ·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 적용기준 완화(신보) · ‘보증한도 산출방법’을 완화

한편 기업대출 중 기업의 업종도 대손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대출의 비중과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대출의 비중의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쌍용건설, 벽산건설, STX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양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및 파산 절차를 밟았으며, 부동산업과 임대업에서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등 내수에 민감한 업종들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등으로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2005년 9.4%에서 2008년 13.5%까지 확대되었으나 2009년부터 축소되어 2012년말 10.7%를 기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0.3%에서 2006년 8.9%까지 축소되었다가 2007년부터 확대되어 2012년말 현재 9.7% 수준이다.

<그림 12> 국내은행의 건설업 대출 및 제조업 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주 :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대출과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대출은 원화대출 대비 비중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건설업으로의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었다. 가령 아래 <표 17>에서 보듯이 2011년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대출의 만기연장, P-CBO를 통한 유동성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는 Fast Track을 이용하는 건설사에 대해 65%의 보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 17〉 건설업 대출 관련 정책 추이

		내 용
2011.5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사업장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 ·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하여 정상화 추진 ·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 50%)를 통해 지원
2012.8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조원 규모의 건설사 P-CBO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 · Fast-Track은 건설사에 대한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 · PF정상화뱅크를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

다) 명목 순이자마진

대출을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대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리에는 조달금리, 대출취급 경비, 적정이윤 외에 신용리스크가 반영된다. 즉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가격화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높을수록 가산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높은 곳에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예대금리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증가가 신용리스크에 대한 국내은행의 선호도 변화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목 순이자마진을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각 은행의 리스크 선호도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순이자마진을 일종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로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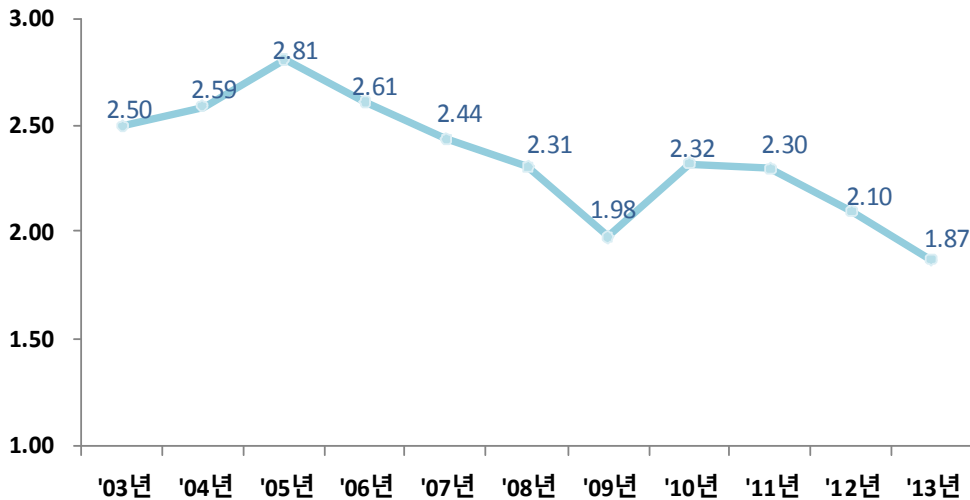
리스크 선호도의 도구변수로 예대금리차를 배제한 이유는 은행의 대손비용에 유가증권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명목 순이자마진은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 거둔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순이자마진은 대손비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손비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있어 거시변수만 고려할 때의 상관관계는 음(-)의 값이다. 순이자마진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의 차이가 대손비용이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의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한다면 거시적 추세에 따른 부(-)의 상관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국내은행의 '13년중 영업실적)

라) 비이자수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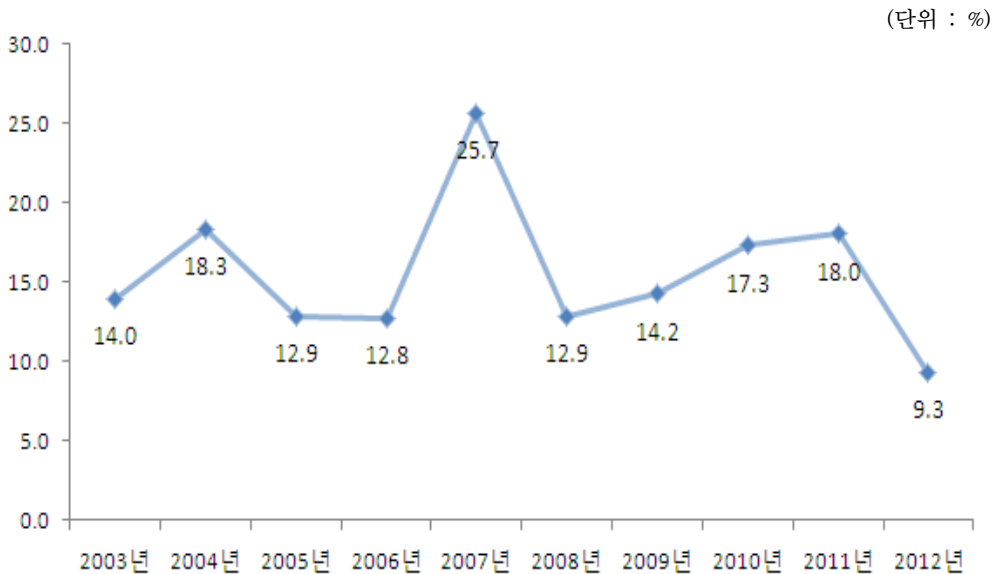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은 수익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투자은행 업무 영위 등을 통하여 비이자수익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의 확대를 통해 수익기반 다각화에 성공한 점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의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회의적이었다. 가령 De Young and Roland(2001)는 미국 은행의 수수료 수입 확대가 은행 수익의 변동성만 확대했다고 발표했으며, Stiroh and Rumble(2006)은 비이자수익 비중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위험증가에 의해 상쇄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은행의 수수료이익이 위험조정이익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서병호·강종만(2011)의 연구에서도 수수료이익은 위험조정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의 직원 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본점 인력을 비이자수익 업무에 다수 배치할 경우 대출심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영업점에서도 금융상품 판매에 집중할수록 대출 영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이자수익의 비중도 대손비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자수익 대비 비이자수익의 비중을 독립변수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비이자수익 비중과 대손비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추이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대손비용 관련 전략적 요인 분석

가) 수익성

선행연구에서는 수익평준화 가설의 검증을 위해 총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총자산이익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 ‘고이익 더미변수’를 상정하였다.

이익이 많이 날 때 자산의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세금 이슈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여할 사안이지만, 이익이 적게 날 때 자산의 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것은 건전성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이 관여할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아닌 금감원이고 최소적립률 규제는 대손충당금의 과소 충당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손비용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고이익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특정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이 해당연도 국내은행의 전체평균 총자산이익률보다 높을 때 1이고 그렇지 않을 때 0의 값을 가진다.

총자산이익률이나 고이익 더미변수는 ‘건전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손비용’ 부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자본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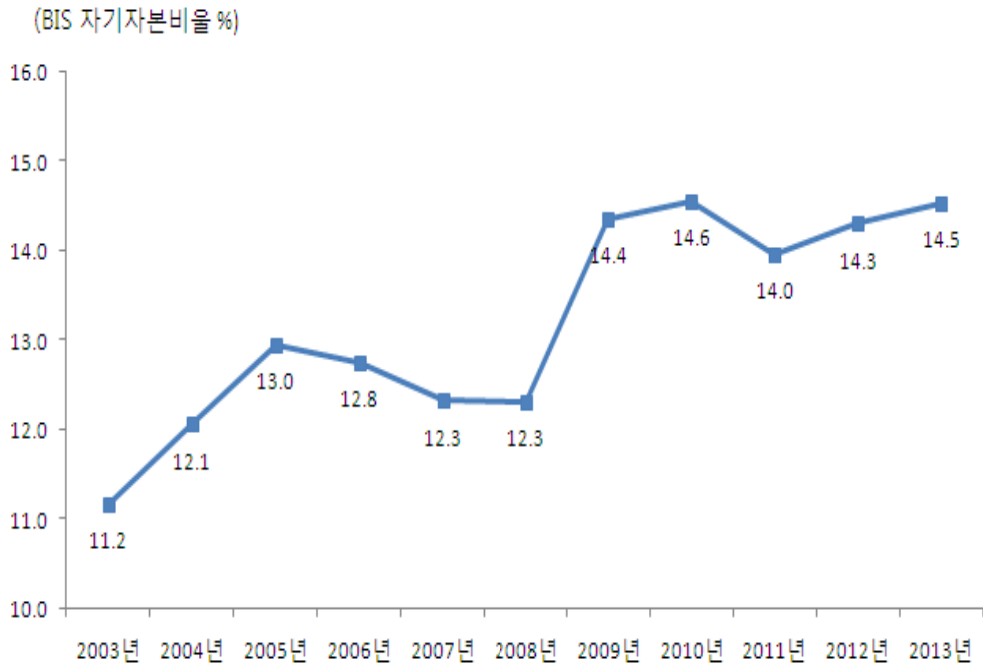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는 자본관리 가설의 검증을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 ‘저자본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본적정성이 나쁜 은행의 경우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높게 가져갈 유인이 있으나 자본적정성이 좋은 은행에서 대손충당금을 필요 수준보다 더 낮게 가져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했다시피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의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행의 자의성이 있는 부분은 과다 적립 부분일 것이다.

‘저자본 더미변수’는 특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원의 우량은행 기준인

10%에 미달하면 1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이다. 저자본 더미변수의 경우 '건전성으로 설명되지 않은 대손비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14%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15〉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신임 CEO

최근 일부 국내은행에서는 신임 CEO가 전임 CEO의 공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집권 1년차에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적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새로 부임한 해의 대손비용은 본인이 집행한 여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도 첫 해에

많이 정리하여 놓으면 본인의 임기 동안에는 부실채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입 CEO를 향한 세간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신입 CEO 더미변수를 상정하였다. 신입 CEO 더미변수는 해당 연도에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이 새로 부임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신입 CEO 더미변수는 '건전성과 무관한 대손비용' 부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 통제변수

은행의 대손비용은 은행의 특성 외에도 거시경제 사이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거시경제의 경우 GDP성장률, 물가, 금리 외에도 금융사고 발생과 스캔들 등 변수화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한 거시변수를 사용하기보다 각 연도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연도 더미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은행의 국내 대출시장 점유율, 특수은행 여부, 지방은행 여부 등을 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2. 실증분석 자료 및 특성

본 보고서의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간이며, 연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일반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아래 <표 18>에서 보듯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구하였으며, GDP성장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18〉 변수의 출처 및 계산방식

변 수		출 처	계산방식
설명변수	대손비용 비중	금융감독원	(대손상각비+대손준비금)/대출채권
	예상 대손비용 비중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증가분/대출채권
	실질 대손비용 비중		대손비용 비중-예상 대손비용 비중
독립변수	대출증가율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대출증가율-GDP성장률
	전기 대출증가율		이전연도 대출증가율-이전연도 GDP증가율
	순이자마진	금융감독원	명목 순이자마진
	기업대출 비중		원화기업대출/원화대출
	신용대출 비중		원화신용대출/원화대출
	건설 · 부동산 · 임대 비중		원화대출 중 건설 · 부동산 · 임대업 대출/원화대출
	도소매 · 숙박 · 음식 비중		원화대출 중 도소매 · 숙박 · 음식업 대출/원화대출
	비이자수익 비중		비이자수익/(비이자수익+이자수익)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고이익 터미		해당연도 국내은행 평균보다 ROE가 높으면 1, 아니면 0
	BIS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저자본 터미		해당연도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이면 1, 아니면 0
CEO 교체	해당연도에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 교체되면 1, 아니면 0		
통제변수	대출시장점유율	원화대출/국내은행 원화대출	
	지방은행 터미	지방은행 1, 아니면 0	
	특수은행 터미	특수은행 1, 아니면 0	
	연도 터미	2003~2012 각 연도에 해당되면 1, 아니면 0	

표본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아래 <표 19>와 같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평균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은 각각 평균 58.1%와 41.1%였다.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의 대출이 전체 원화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평균 12.2%였으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의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평균 10.9% 수준이었다. 순이자마진은 평균 3.2%p였으며, 비이자수익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9%였다. ROE는 평균 11.5%로 요즘 기준으로는 매우 높았고 해당 연도 평균보다 ROE가 더 높은 경우가 60.7%에 달했다.²⁰⁾ 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2.9%로 양호했으며, 동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해당 연도에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교체된 경우는 전체의 27.2%로서 1/4에 가까웠는데, 이는 평균 4년에 한 번 꼴로 회장이나 은행장이 교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9> 주요 독립변수의 기초 통계

(단위 : %)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출증가율	5.9	10.8	-32.0	37.5
기업대출 비중	58.1	16.4	22.9	97.8
신용대출 비중	41.1	7.1	21.4	56.8
건설·부동산·임대업 비중	12.2	4.6	2.2	23.5
도소매·숙박·음식업 비중	10.9	4.3	4.8	26.8
순이자마진	3.2	0.8	0.9	4.9
비이자수익 비중	9.9	5.4	1.3	33.5
ROE	11.5	8.2	-46.3	43.9
고이익 더미	60.7	48.9	N/A	N/A
BIS	12.9	1.9	8.9	18.1
저자본 더미	3.5	18.4	N/A	N/A
CEO 교체	27.2	44.6	N/A	N/A

20) 이는 ROE 실적이 좋지 않은 일부 은행들이 전체 은행의 ROE 평균을 크게 낮추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간 인수·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은행 자료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령 A은행이 2002년 5월에 B은행을 인수하여 합병한 경우에 2001년말의 A은행과 2002년말의 A은행을 같은 은행으로 해석하면 데이터 상 대출이 급증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 기간인 2003~2012년 중 국내은행의 인수·합병 사례는 총 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은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두 은행의 장부를 합친 2006년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의

〈표 20〉 표본 관련 국내은행 인수·합병

(단위 : 억원)

합병년월	합병은행	총자산(전년도 말잔)	비 고
2001.04	한 빛 은 행	755,488	합병은행
	평 화 은 행	60,905	피합병은행
	광 주 은 행	61,319	피합병은행
	경 남 은 행	75,982	피합병은행
2001.04	국 민 은 행	962,424	합병은행
	주 택 은 행	663,958	피합병은행
2002.05	신 한 은 행	620,175	합병은행
	제 주 은 행	14,698	피합병은행
2002.11	하 나 은 행	544,299	합병은행
	서 울 은 행	233,738	피합병은행
2003.07	조 흥 은 행	712,981	피합병은행
	신 한 은 행	697,151	합병은행
2003.10	외 환 은 행	614,526	Lone Star
2004.02	씨 티 은 행	556,830	Citigroup
2005.01	SC제일은행	510,290	SCB

주 : 씨티은행은 2004년말 잔액, SC제일은행은 2005년말 잔액
 자료 : 『은행경영통계』

신한은행과 그 이전의 신한은행은 별개의 은행으로 처리하였다.²¹⁾

국내은행의 수는 2003년 18개였으나 2006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하나의 은행으로 합치면서 17개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행 수는 총 173개(18*3+17*7)이다.

〈표 21〉 연도별 표본은행

	일반은행
2003~2005년 (18개)	국민은행, 신한은행A, 조흥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한국외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산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2006~2012년 (17개)	국민은행, 신한은행B, 하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수산협, 기업은행, 산업은행

3.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가. 대손비용 분석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은 회계 상의 대손비용 증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22〉에 요약되어 있는데, 우선 대출증가율의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대출 증가율을 기록할 경우 해당 연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손비용이 작아지지만, 그 다음 해에는 통계적으로

21) 2006년의 대출증가율은 2005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대출금 합계와 2006년 신한은행 대출금 사이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또한 2001년에 있었던 한빛은행과 평화은행의 합병,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2002년에 있었던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도 2년전 대출증가율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합병 전 각 은행의 대출금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2003년 론스타(Lone Star)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2004년 씨티그룹(Citigroup)의 한미은행 지분 인수, 2005년 제일은행에 대한 스탠더드 차터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의 인수 등은 대주주만 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인수·합병 이전의 신한은행과 인수·합병 이후의 신한은행은 별개의 은행으로 간주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명목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다대출은 단기적 효과보다 중장기적 폐해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05~2008년 국내은행의 외형경쟁이 2008~2009년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22〉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계 수	표준오차	Z	P> z
대출증가율	-0.0092 *	0.0051	-1.78	0.075
전기 대출증가율	0.0129 ***	0.0046	2.80	0.005
순이자마진	0.2575 ***	0.0761	3.38	0.001
기업대출 비중	-0.0039	0.0049	-0.78	0.435
신용대출 비중	0.0072	0.0073	0.98	0.325
건설·부동산·임대	0.0256 **	0.0128	2.00	0.045
도소매·숙박·음식	-0.0026	0.0147	-0.17	0.862
비이자수익 비중	0.0673 ***	0.0112	6.02	0.000
대출시장점유율	0.0003	0.0115	0.03	0.978
지방은행 터미	0.0004	0.0019	0.20	0.839
특수은행 터미	0.0027	0.0019	1.45	0.147
2003년	0.0071 ***	0.0019	3.65	0.000
2004년	-0.029 *	0.0018	-1.65	0.099
2005년	-0.0060 ***	0.0017	-3.53	0.000
2006년	-0.0067 ***	0.0016	-4.12	0.000
2007년	-0.0070 ***	0.0016	-4.42	0.000
2008년	-0.0019	0.0016	-1.19	2.333
2009년	-0.0012	0.0016	-0.78	0.435
2010년	-0.0011	0.0016	-0.68	0.497
2011년	0.0010	0.0016	0.64	0.520
샘플수	173			
R ²	0.6322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대출포트폴리오 변수들 중에는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으로의 대출 비중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손비용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업대출 비중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이유는 주택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도 기업대출만큼 신용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담보 위주의 대출만 주로 취급하는 국내은행 입장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국내은행이 그만큼 신용대출 문턱을 높게 가져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신용대출의 문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무담보로 인한 신용대출의 리스크가 상쇄되는 것이다. 한편 도소매업·숙박업·음식업 등 내수에 민감한 업종들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동 업종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업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등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확실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대손비용 비중이 큰 은행은 대손비용이 작은 은행에 비해 순이자마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용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가산금리 부과에 따라 순이자마진이 높아지므로 위험한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은 순이자마진이 높은 대신 대손비용도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를 시계열(time-series)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대손비용 비중이 확대될 때는 통상 가산금리를 높임으로써 순이자마진을 더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손비용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순이자마진이 계속 축소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이자수익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손비용 비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비이자수익 비중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은 위험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는 Stiroh and Rumble(2006)와 서병호·강종만(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나. 실손비용 분석

대손비용 항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총당금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IV장의 실증분석 모형에서 설명했듯이 해당 연도에 사후적으로 손실처리된 실손비용이 계산된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손비용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는 부분이다. 시계열(time-series)로는 경기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횡단(cross-section)으로는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대출 포트폴리오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임의 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표 23>과 같이 연도 더미변수들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표 23> 실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계 수	표준오차	Z	P> z
대출증가율	-0.0205 ^{***}	0.0074	-2.76	0.006
전기 대출증가율	-0.0003	0.0066	-0.05	0.963
순이자마진	0.2772 ^{***}	0.0986	2.81	0.005
기업대출 비중	-0.0051	0.0060	-0.84	0.400
신용대출 비중	0.0039	0.0097	0.40	0.690
건설·부동산·임대	0.0353 ^{**}	0.0165	2.14	0.032
도소매·숙박·음식	-0.0029	0.0181	-0.16	0.874
비이자수익	0.0813 ^{***}	0.0156	5.22	0.000
대출시장점유율	0.0006	0.0135	0.04	0.965
지방은행 더미	-0.0004	0.0024	-0.16	0.873
특수은행 더미	0.0039 [*]	0.0022	1.74	0.082
2003년	0.0040	0.0027	1.46	0.144
2004년	-0.0024	0.0026	-0.93	0.354
2005년	-0.0065 ^{***}	0.0024	-2.65	0.008
2006년	-0.0088 ^{***}	0.0024	-3.71	0.000
2007년	-0.0099 ^{***}	0.0023	-4.27	0.000
2008년	-0.0069 ^{***}	0.0022	-3.06	0.002
2009년	-0.0034	0.0023	-1.50	0.135
2010년	-0.0067 ^{***}	0.0023	-2.90	0.004
2011년	-0.0002	0.0024	-0.10	0.917
샘플수	173			
R ²	0.5134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보여 경기변동의 영향이 컸음을 밝혔으며, 대출증가율, 건설·부동산·임대업 비중 등 대출포트폴리오 관련 변수들과 순이자마진, 비이자수익 비중 등 비즈니스 모델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대손비용 비중 분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한다. 대손비용 분석과 실손비용 분석의 결과가 유사한 이유는 앞의 <표 12>의 표본은행 통계에서 보듯이 실손비용이 대손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 예상 대손비용 분석

대손비용 항목 중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인 충당금의 증가분은 IV장에서 예상 대손비용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규모 면에서는 전체 대손비용에서 예상 대손비용의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존문헌에서 제기 하였던 자본관리 가설, 수익평준화 가설 등을 검증하는 데에는 본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 ROE, BIS 자기자본비율, CEO 교체 더미 등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오직 BIS 자기자본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상 대손비용 비중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본적정성이 나쁜 은행일수록

<표 24> 예상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계 수	표준오차	Z	P> z
고정이하여신비율	-0.0528	0.0974	-0.54	0.588
ROE	-0.0117	0.0077	-1.53	0.127
BIS	-0.0571 **	0.0291	-1.96	0.050
CEO 교체	-0.0015	0.0012	-1.27	0.205
샘플수	173			
R ²	0.0364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대손충당금 수준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기존의 자본관리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한편 예상 대손비용 비중은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통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건전성 상태보다는 미래의 건전성에 대한 예상에 따라 충당금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본관리 가설과 수익평준화 가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자본이 부족한 은행’이나 ‘수익이 매우 높은 은행’이 자본의 관리나 수익의 평준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OE나 BIS 자기자본비율보다는 고이익 더미나 저자본 더미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예상 대손비용 비중은 고이익 더미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수익평준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25〉 예상 대손비용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임의효과 분석

	계 수	표준오차	Z	P> z
고정이하여신비율	0.1255	0.0946	1.33	0.185
고이익 더미	0.0019*	0.0011	1.71	0.087
저자본 더미	0.0043	0.0033	1.33	0.183
CEO 교체	-0.0013	0.0012	-1.03	0.302
샘플수	173			
R ²	0.0348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익 지표의 경우에는 고이익 더미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국내 은행 중 이익이 낮다고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은행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적정성 지표의 경우에는 BIS자기자본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국내은행 중 자본적정성이 우수한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V. 정책적 시사점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을 해외 주요국 은행들의 대손비용과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은행은 해외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건전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보다 많이 적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해외 주요국 은행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다. 최근 국내은행들은 수익성 악화 및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은행의 보신주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내은행이 소위 '비 오는 날 우산 뺏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무조건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스페인 처럼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낮춤으로써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 호황기의 과다 대출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기 침체가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급증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손비용 및 실손비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순이자마진과 대손비용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신용리스크가 높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높게 받음으로써 대손비용의 증가분을 상쇄해 왔다는 의미인데, 최근에는 가산금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가산금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를 축소하게 되고 이것이 해당업종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극도로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한 간접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국내은행이 대손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 대출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국내은행이 대손비용을 수익으로 상쇄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한 편인데, 은행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및 실손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명목 GDP 증가율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증가율은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내은행 산업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집행하는 경우 은행의 국내시장 대출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의 격차를 주요 변수로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상 대손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기존문헌에서 제기한 자본관리 가설과 수익 평준화 가설이 국내은행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은행이 대손충당금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비용 외에 자사의 수익률과 자본적정성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을 때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CEO가 교체되는 경우 자신의 업적을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적립한다는 주장을 검증해 보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문현주,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성과 은행가치 관련성 연구」, 『회계저널』, 2005.
- 배수현·김종두,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은행의 이익유연화 요인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12.
- 서병호·강종만,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KIF 연구보고서』, 2011
- 이재연, 「부실채권 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발표자료, 2013.
- 최효순, 「은행의 대손충당금전입 조정과 주가반응」, 『증권학회지』, 2003.
-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한국은행,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BOK 경제리뷰』, 2014.
- Ahmed, A. S., Takeda, C., Thomas, S., “Bank Loan Loss Provisions: a Reexamination of Capital Management, Earnings Management and Signalling Effec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28, 1999.
- Beatty, A., Chamberlain, S., Magliolo, J., “Managing Financial Reports of Commercial Banks: the Influences of Taxes, Regulatory Capital and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3, 1995.
- Collins, J., Shackelford, D., Wahlen, J.,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3, 1995.
- De Young, R. and K. P. Roland, “Product Mix and Earnings Volatility at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a Degree of Total Leverage Model,”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001, pp.54~84.
- Docking, D. S., Hirschey, M., Jones, E., “Information and Contagion Effects of Bank Loan-Loss Reserve Announcements,” *Journal of Financial*

- Economics* Vol.43, 1997.
- Fonseca, A. R., Gonzalez, F.,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Bank Income Smoothing by Managing Loan-Loss Provis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32, 2008.
- Moyer, S.,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s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13, 1990.
- Stiroh, K. J. and A. Rumble, “The Dark Side of Diversification: The Case of U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06, pp.2131~2161.
- Wahlen, J., “The Nature of Information in Commercial Bank Loan Loss Disclosures,” *The Accounting Review* Vol.69, 1994.
- Wall, L. D., Koch, S., “Bank Loan-Loss Accounting: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2000.

Abstract

Determinant Analysis of Bank's Provision for Bad Debts in Korea

Christopher Byungho Suh

This paper analyzes determinants of provision for bad debts of Korean banks between 2003 and 2012, during which time Korean banks' profitability fluctuated dramatically with the change in provision for bad debts.

An empirical study using panel data has been applied, using yearly financial data, to find out if loan growth, loan portfolio, net interest margin and non-interest income ratio have impacted Korean banks' provision for bad debts to total loan ratio. The results show that variables such as loan growth exceeding GDP growth, construction loan ratio, nominal net interest margin and non-interest income to total income ratio had increased Korean banks' provision for bad debts with statistic significance. This suggests that Korean banks' recent surge in provision for bad debts is related to excessive loan competition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at high net interest margin is required to sustain the surge in provision.

Policy implication for this study is two-folded. Firstly, it would benefit Korean economy to adopt dynamic provision model currently used in Spain because it would be able to prevent excessive loan competition in an up-phase, while reducing the need for Korean banks' withdrawal of high risk loans in a downturn. Secondly, Korean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controlling banks' interest rate because, if not, banks will be forced to adjust loan portfolio so that customers with low credit will not be able to borrow money from the bank at all.

한국금융연구원(KIF) 발간물 현황

1. 정기 간행물

■ 주 간

- 주간 금융브리프

■ 계 간

- 금융연구
-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 연 3회간

- 한국경제의 분석
- 경제전망시리즈

2. 연구 발간물

■ KIF 연구총서

- 2014-01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 분석과 전망, 2014.7./구본성 · 김동환 · 박해식 · 이명환 · 박성욱 · 김영도 · 임 진 · 박종상 · 김석기 · 송민기

■ KIF 연구보고서

-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9./서병호
- 2014-0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14.9./노형식 · 임 진
- 2014-01 금융소비자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7./노형식 · 송민규 · 연태훈 · 임형준
- 2013-08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2013.12./박종규
- 2013-07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절감(가격인하) 효과 : DEA 비용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12./이석호
- 2013-06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13.12./김영도 · 서병호
- 2013-0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10./김영도
- 2013-0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2013.9./ 박성욱 · 이규복
- 2013-03 정보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 정보전달 속도, 2013.5./박재윤 · 이충열 · 강임호 · 이선호
- 2013-02 주가지수 편입의 효과 : KOSPI 200을 중심으로, 2013.2./연태훈
- 2013-01 증권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2013.1./강종만
- 2012-05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2.8./한상섭 · 이병운
- 2012-04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분석 : 은행 vs 시장, 2012.7./김동환
- 2012-03 최초공모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장기성과의 변화 : 기업공개제도 개선효과에 주는 시사점, 2012.6./강종만

- 2012-02 회사채 유동성 프리미엄 분석 및 시사점, 2012.3./이규복 · 임형준
 2012-01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분석, 2012.2. /김자봉 · 이석호
 2011-0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식과 외화유동성 위험, 2011.12./이병윤 · 이윤석
 2011-04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2011.12./박해식 · 송민규
 2011-03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2011.8./신용상
 2011-02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2011.6./서병호 · 강종만
 2011-01 해외주식투자 환헤지에 대한 연구, 2011.1./임형준
 2010-07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규제자본금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10.12./김자봉 · 김병덕
 2010-0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2010.11./임형석
 2010-05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 2010.10./장 민 · 이규복
 2010-04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2010.10./이지연
 2010-03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2010.10./김정한 · 이대기
 2010-02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0.10./강종만 · 김영도
 2010-01 국내의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0.10./서병호 · 이윤석

■ KIF 정책보고서

- 2014-04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2014.9./박종규
 2014-03 금융회사 회생 · 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2014.8./임형석
 2014-02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Financial Restraint)에 관한 연구, 2014.7./김동환
 2014-01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4.6./손상호 · 김영도
 2013-06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2013.12./손상호
 2013-05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3.11./이재연 · 이시연
 2013-0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2013.6./KIF
 2013-03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2013.6./이석호
 2013-0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2013.4./KIF
 2013-01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3./손상호 · 이재연
 201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2011.9./이시연 · 구분성
 2011-02 금융그룹의 통합리스크 관리, 2011.7./이명환
 2011-0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11.1./구정한 · 이시연
 2010-01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10./이석호 · 구정한

■ KIF 금융리포트

- 한국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2014.6./강명현 · 이혜란
- 금융지주회사의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3.11./김동원 · 노형식
- 금융기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3.8./이순호
-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2013.6./손상호 · 김동환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단기 지표금리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2013.3./김영도
- 가계부채 백서, 2013.3./KIF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CP에 대한 국제논의동향과 시사점, 2012.10./김인섭
- 은행의 대출확대전략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2012.9./서정호
- 중국자본의 해외 실물 및 금융투자 현황과 전망, 2012.7./이 근 · 지만수 · 서봉교

- Regulatory Reforms and the Future of Finance, 2012.6./KIF
- 우리나라 금융부채 현황 및 과제, 2012.5./길재욱 · 이준행
- 국제통화시스템 : 개혁과 과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 Reforms & Agendas), 2011.12.
- 은행의 국경간 인수 · 합병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1.12./서병호
- 금융 · 통신 · 유통의 바람직한 컨버전스 전략, 2011.11./강임호 · 서정호
-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 안정성, 2011.11./박재윤 · 이충열
-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1.9.
- 퇴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2011.5./김병덕
- 보험사의 시스템리스크 관련성 검토, 2011.5./이석호
-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2011.4./서병호
- IFRS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2011.3./송인만 · 노형식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 2011.2./서병호
- 국내 기업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활성화 방안, 2011.2./오세경
- 금융그룹의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연구, 2010.12./김자봉 · 김동환
-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 2010.12./이건호
- 지급결제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2010.12./김자봉
-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의 시각 - “민간부문과의 대화”, 2010.12.
-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9./서병호
-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2010.7./강종만 · 김영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논의와 전망, 2010.7./김병덕 · 함준호
- 외국인 투자자가 본 국제금융중심지 홍콩의 일곱 가지 매직, 2010.2./최광해 외
- 한국금융회사의 최근 중국진출동향과 향후 과제, 2009.12./유광열
- 한국의 G-20 리더십 : 2010년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2009.1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2009.4.
-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방안, 2008.2./임병철 · 구정환 · 서병호 · 강종만
-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 2007.11./이석호
- 동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2007.9./강삼모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2007.9./신용상 · 구분성 · 하준경 · 이규복 · 송재은 · 이윤석
- 국내 금융회사의 모기지 활성화 방안, 2007.7./고성수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2007.7.
- 은행의 성과지속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2007.3.
-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 2007.3.
- 4개 시중은행의 바젤 II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2007.2./송연수
-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2006.9./지급결제연구회
-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 현황 평가와 향후 과제, 2006.6./임병철 · 김자봉
-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06.6./지동현 · 구분성 · 김자봉
-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2006.6./구분성 · 구정환 · 이명환
-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6.6./조운제
- 해외 대안금융기관의 현황과 시사점, 2006.4./정찬우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2005.8./남재현
-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과제, 2005.3./정찬우
- 디지털 금융의 이해, 2003.9./강임호 외
- 유럽 자본시장 및 결제시스템의 주요 변화, 2003.5./곽선호 · 이경형

- 금융상품의 법률관계, 2003.2./함귀용
- 아르헨티나 공기업의 민영화와 시사점, 2002.12./강종만
- IMF자금 조기상환의 의미와 향후과제, 2001.12./최홍식 · 박해식 · 박종규
- 자본이동과 환율변동 : 분석 및 예측, 2001.12./김정환 · 박해식 · 장원창 · 차백인
-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 · 현재 · 미래, 2001.11.
- 은행 자산관리 및 은행 경영전략, 2001.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실태조사결과 및 개선 방향, 2001.9./김우진 외
- 미 · 일 자본시장의 구조 및 변화, 2001.7./이경형 외
- 은행구조조정 및 사이버뱅킹, 2000.9.
-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제도, 1999.12./이광상 외
-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 1999.12.
- 자산건전성 분류 사례집, 1999.11./손상호 · 김동환 외
- 은행산업 연봉제 도입방안, 1999.11./김병연 외
- 가치경영을 통한 은행의 경영혁신, 1998.7./지동현 · 함유근
-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Opening in East Asia, 1998.3.
- 금융정보화의 추진방안, 1998.3./지동현 · 함유근
- 국제화 환경에서의 금융개혁, 1998.2.
-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1998.2./박경서 · 김선호
- 스웨덴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지원정책, 1997.12./이장영 · 박해식 외
- 경제자유화와 자본자유화, 1997.12./이천표
-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1997.6.
- 전자기술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CD Rom 포함), 1997.3.
- 외국의 은행합병현황, 1996.9./김병연 · 박경서 외
- 남미 주요국의 금융제도, 1996.8./이경형 · 정승원 외
-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1996.8./박영철 · 양원근 외
- 체제전환국의 금융제도, 1995.4.
- 외환제도개혁연구, 1994.11.
- 금융제도개편연구, 1993.12.
- 외환시장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연구, 1993.9.
- 외국환관리법 공청회, 1991.10.

■ KIF VIP 시리즈

- 2014-10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방안, 2014.8/박성욱 · 지만수 · 송민기
- 2014-09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2014.8/김우진
- 2014-08 G-SIBs 규제 영향과 시사점, 2014.7/임형석
- 2014-07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2014.6/김영도
- 2014-06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해외채권투자의 활성화, 2014.5/구본성 · 임형준
- 2014-05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2014.4/노형식 · 이순호
- 2014-04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4/이지언 · 최공필
- 2014-03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2014.3/박성욱 · 박종상
- 2014-02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과 전망, 2014.2./박성욱 · 송민기
- 2014-01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2014.1./김병덕
- 2013-10 일본의 고령화 대책, 2013.11./김동환

- 2013-09 금융거래세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3.7./김정한 · 박성욱 · 박종상
- 2013-08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2013.7./이명환
- 2013-07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2013.5./서정호 · 구본성
- 2013-0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 소득 · 자산 구조와 시사점, 2013.5./박해식 · 임진
- 2013-05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2013.4./송민규 · 임형준
- 2013-04 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2013.4./김영도 · 송민규 · 연태훈 · 임형준
- 2013-03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자료 기반, 2013.3./김영도 · 임진
- 2013-0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2013.1./구본성 · 김정한 · 이명환 · 노형식 · 임진
- 2013-01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점검 :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3.1./박해식 · 박성욱
- 2012-09 국내은행의 PB 비즈니스 발전방안, 2012.12./서병호 · 김우진
- 2012-08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2.7./강종만
- 2012-07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2012.7./박해식 · 박성욱
- 2012-0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012.5./이윤석
- 2012-05 신용상담기능의 활성화방안, 2012.3./서정호
- 2012-04 우리나라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2012.3./김우진 · 서병호
- 2012-03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할 강화방안, 2012.2./박성욱 · 박재하
- 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1./김영도
- 2012-01 외국인 채권 매수 · 매도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2012.1./김영도 · 임형준
- 2011-26 AT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방향, 2011.12./송민규 · 연태훈
- 2011-25 연기금 자산운용관련 개선방안, 2011.12./김병덕
- 2011-24 최근 인플레이션의 특징 및 시사점-지속성 및 변동성을 중심으로, 2011.12./이규복 · 임형석
- 2011-23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와의 비교, 2011.12./이명환 외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11./강종만
- 2011-21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연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2011.11./김영도
- 2011-20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1.10./김동환
- 2011-19 한국 · 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1.10./서병호
- 2011-1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 2011.9./박성욱 · 장민
- 2011-17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1.8./이지언 · 연태훈 · 김영도 · 송민규 · 임형준
- 2011-16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1.8./김정한 · 장민 · 이규복
- 2011-15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 2011.7./김정한 · 박성욱
- 2011-14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2011.7./이지언 · 임형준
- 2011-1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 2011.7./임형석
- 2011-12 비은행 금융회사 금리 결정요인 분석 :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2011.7./이규복 · 이순호
- 2011-1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안, 2011.7./이재연
- 2011-10 국내은행의 외환부문 리스크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 2011.7./박성욱 · 송민규
- 2011-0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 2011.7./이시연
- 2011-08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2011.6./이지언 외
- 2011-07 증권대차시장의 발전방안, 2011.6./김영도
- 2011-06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환업무 관련 효율화 방안, 2011.5./노형식 외

- 2011-05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4./김병연 · 서정호
- 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4./강종만
- 2011-0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2011.4./ 송민규
- 2011-0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2011.3./김병덕 외
- 2011-01 금융안정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방향, 2011.3./박성욱 외
- 2010-16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서정호
- 2010-15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2010.11./정찬우
- 2010-14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10.10./이재연
- 2010-13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 :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 2010.10./노형식
- 2010-12 최근 달러 캐리거래의 동향과 시사점, 2010.9./김정환 · 이윤석
- 2010-11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0.8./장민 · 이규복
- 2010-10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0.8./장민 · 이규복 · 임형석
- 2010-09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0.8./이지언 · 임형준
- 2010-08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2010.8./손상호 · 이상제
- 2010-07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 2010.6./김정환 · 임형준 · 이지언
-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5./서병호
- 2010-05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010.5./김동환 · 정찬우 · 이재연
- 2010-04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2010.4./장민 · 이규복
- 2010-03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2010.4./서병호 · 이윤석
- 2010-02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4./이지언 · 김영도
- 2010-01 녹색금융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0.2./구정환
- 2009-06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2009.12./이지언
- 2009-05 외환보유액 관리비용과 필요외환보유액 추정, 2009.12./김정환 · 이윤석 · 임형준
- 2009-04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보호체제의 구축 방안, 2009.12./김병연
- 2009-03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2009.12./장민 · 이규복 · 임형석
- 2009-02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과 향후 금융정책 방향, 2009.11./장민 · 이규복 · 임형준
- 2009-01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개선방안, 2009.10./김동환

■ Finance VIP Series

- 2012-03 Evaluation on the Monetary Stabilization Account(Term Deposit Facility), 2012.5./임형석
- 2012-02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Trading System in Korea: Issues & Considerations, 2012.5./송민규 · 연태훈
- 2012-01 Recent Inflation: Stylized Facts and Implication-Persistency and Volatility-, 2012.2./ 임형석 · 이규복
- 2011-09 Securities Lending Marke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2011.12./김영도
- 2011-08 Promotion Measures for International Equity Investment, 2011.11./이지언 · 임형준
- 2011-07 Improving Financial Product Disclosure, Centered on Comparative Disclosure, 2011.7./ 송민규
- 2011-06 Introduction of a 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Bank Levy) & its Policy Implications, 2011.6./박성욱 · 김영도
- 2011-05 Financial Policy Tasks for Korea amid an Aging Society, 2011.5./김병덕 외

- 2011-04 Korean Banks' Job Field HRM Systems for Developing Financial Professionals, 2011.3./노형식
- 2011-03 Community Finance in Korea: Policy Directions, 2011.2./정찬우
- 2011-02 Systemic Risk & Macroprudential Supervision, 2011.2./손상호 외
- 2011-01 Korea's Credit Card System: Issues & Potential Measures, 2011.1./이재연
- 2010-13 Wrap Accounts in Korea: Status & Policy Approaches, 2010.10./이지언 · 임형준
- 2010-12 Polici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2010.10./장민 · 이규복 · 임형석
- 2010-11 Impact of Increases in the Base Rate on Household Soundness, 2010.10./장민 · 이규복
- 2010-10 Volcker Rule: Overview & Implications, 2010.7./서병호
- 2010-09 CDS Market for Korean Bonds: Issues & Policy Implications, 2010.6./서병호 · 이윤석
- 2010-08 Impact of Loan-Deposit Ratio Caps on Korea's Financial Markets, 2010.5./이지언 · 김영도
- 2010-07 Housing Market in Korea: Recent Trends & Future Financial Policy Directions, 2010.4./장민 · 이규복 · 임형준
- 2010-06 Exit Strategy: Timing & Considerations, 2010.4./장민 · 이규복 · 임형석
- 2010-05 Reforming the Personal Debt Relief System, 2010.4./김동환
- 2010-04 Structuring a More Robus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2010.3./김병연
- 2010-03 Green Finance: Status & Issues, 2010.3./구정환
- 2010-02 Costs of Maintaining Foreign Reserves & Estimation of Required Foreign Reserves, 2010.3./김정환
- 2010-01 Corporate Distress in Korea: Analysis & Implications for Restructuring, 2010.3./ 이지언

■ KIF 정책토론회 —————

- 2014-01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2014.6./김우진

■ KIF Working Paper —————

- 14-12 기업내부의 사적이득 편취유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4.9./위경우 · 이재현 · 정현재
- 14-11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유형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7./이장우 · 노희진
- 14-10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2014.6./김정식
- 14-09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 2014.6./김경수 · 유경원
- 14-08 은행 예대금리의 결정요인 : 시장금리의 은행금리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2014.6./김상환 · 노형식
- 14-07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및 신흥국 국제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국제에 대한 외국인투자, 2014.6./김동순
- 14-06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연구, 2014.5./이건범 · 김우진
- 14-05 펀드 이용료와 쌍방외부성, 2014.5./민세진 · 이경원
- 14-04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2014.4./오정근
- 14-03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2014.4./강경훈 · 여은정
- 14-02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2014.3./채희율
- 14-01 Growing Global Needs for ACU-Dominated Reserve Assets, 2014.3./최공필
- 13-15 IT기술발전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전략, 2013.12./김준호

- 13-14 공통화폐단위(CCU) 활용을 통한 역내화폐의 국제화 전략, 2013.12./최공필 · 김정한
- 13-13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2013.10./김성민 · 김동석
- 13-12 북한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2013.10./윤덕룡
- 13-11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 2013.10./유경원
- 13-10 ELW시장의 투자자 매매패턴 및 성과분석, 2013.9./최영수
- 13-09 The Effect of IFRS on Loan Loss Provision and Loan Origination Pro-cyclicality: Evidence from European Banks, 2013.9./Lee Seok Hwang · Young Jun Kim
- 13-08 Korean Financial Sector in the Post-Crisis Era: Vision and Policy Issues, 2013.8./Suk Heun Yoon
- 13-07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와 정책과제, 2013.8./강경훈 · 한재준
- 13-06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13.6./정호열 · 송석은 · 안현중
- 13-05 신규공모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3.4./신인석 · 이관영
- 13-04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4./송옥렬
- 13-03 부동산 관련 금융위기의 특징과 정책 대응, 2013.4./박원암
- 13-0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역모기지 활용에 관한 연구, 2013.4./함상문 · 고성수
- 13-01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2013.1./이기영 · 남재현
- 12-14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2012.12./이철환
- 12-13 우리나라 금융권 수신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2.9./최창규
- 12-12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규율체계 정비 및 방향, 2012.8./정기웅
- 12-11 Governance and the Eurozone Crisis: What lessons to East Asian Integration?, 2012.7./Seung-Gwan Baek · Yonghyup Oh
- 12-10 Cross-Border Bond investment,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2012.6./Park, Daekeun
- 12-09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 2012.6./지범하 · 이경주 · 최현자
- 12-08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효과에 관한 연구 : Chop-shop 접근법을 중심으로, 2012.6./박정수 · 서정호
- 12-07 한국경제의 통화수요, 통화정책 및 환율결정 : 공적분 VAR모형에 의한 분석, 2012.6./주한광
- 12-06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2.5./이인호 외
- 12-05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흐름의 특징과 전망 : 신흥국관련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2012.5./강삼모
- 12-04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2012.5./문우식
- 12-03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2012.4./이호진
- 12-02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2012.3./백웅기
- 12-01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in the context of vertical/horizontal integration theory-, 2012.1./Dong-Hwan Kim
- 11-18 외국인 자본유출입 특징과 국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2011.12./정재식
- 11-17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Banks, 2011.12./Lee-Seok Hwang et al.
- 11-16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태적 연관성, 2011.12./한상섭
- 11-15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대·중소기업간 위험공유를 중심으로, 2011. 12./하준경 외

- 11-14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2011.12./함준호
- 11-13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1.10./전성인
- 11-12 산은 민영화 관련 주요 이슈, 2011.10./윤석헌
- 11-11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2011.9./남재현
- 11-10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9./장동구
- 11-09 국내 부동산가격변동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5./고성수
- 11-08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2011.5./송유철 · 원용걸
- 11-07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5./이기영
- 11-06 The Roles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ies for Fiscal Soundness, 2011.5. /Man-Woo Lee · Junggun Oh · Dong Heon Kim
- 11-05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1.5./김중관 · 이승영
- 11-04 On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Currency Mismatch, 2011.5./Seung-Gwan Baek
- 11-03 원/달러 변동성 증대의 결정요인 분석, 2011.4./성태운
- 11-02 녹색금융의 자본조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2011.3./전용일 외
- 11-01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2011.3./박성훈
- 10-14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2010.12./하준경
- 10-13 Constructing an Enhanced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as a Global Central Bank, 2010.11./Gongpil Choi
- 10-12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금융중심지에 대한 함의, 2010.9./송치영 · 박해식
- 10-11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risis and Reforms, 2010.9./Jai-won Ryou, Shinji Tokagi
- 10-10 금융그룹에서 범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2010.9./송옥렬
- 10-09 최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 2010.8./박영석
- 10-08 차이나머니의 해외투자 향방과 시사점, 2010.7./김경엽
- 10-07 국내 투자은행(IB)의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 2010.7./김진호
- 10-06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2010.7./이종욱
- 10-05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 2010.7./김정식
- 10-04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의 비대칭성과 투자쏠림현상, 2010.6./강경훈 외
- 10-03 재정정책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패널분석, 2010.6./박완규 외
- 10-02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2010.5./채희을
- 10-01 가격경직성과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2010.4./정용승
- 09-03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의 위험추구와 효율성에 미친 영향, 2009.12./정형권 · 조성욱
- 09-02 금융 산업에서의 경쟁과 건전성, 2009.12./이인호
- 09-01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2009.11./김종민 · 정순섭

※ 홈페이지(www.kif.re.kr)를 참조하시면, 한국금융연구원의 모든 발간물을 보다 상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화번호	위 치
서울	본사 직영서점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교보문고(본점)	397 - 3628	광화문 사거리
	영풍문고(본점)	399 - 5632	종각
	(여의도점)	6137 - 5254	국제금융로
	반디 앤 루니스 (종로타워점)	2198-3000	종각역
	(코엑스점)	6002 - 6071	삼성역
부산	영 광 도 서	(051) 816 - 9500	서면 로타리
인터넷서점	에스이십사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in.co.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반디 앤 루니스	www.bandinlunis.com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서 병 호(徐丙昊)

■ 약력

- 서울대학교(서양사학 학사)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경제학 석·박사)
-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 논저

-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김영도와 공저, KIF 연구보고서, 2013년 12월)
- Determinants of Banks' CDS Spread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Yoonsok Lee, Seoul Journal of Economics, December 2011, Vol.24, No.4.
-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강종만과 공저, KIF 연구보고서, 2011년 6월)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KIF 정책조사보고서, 2009년 6월)
- Employment Consideration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KIF Financial Economics Series, March 2009

KIF 연구보고서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년 9월 19일 인쇄

2014년 9월 24일 발행

발행인 **윤 창 현**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ISBN 978-89-503-0612-0 93320

값 5,700원

